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2021-2025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 1

Ⅱ. 건축분야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 7

Ⅲ.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 22

Ⅳ.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 30

Ⅴ. 과업 추진 체계 ····· 66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

–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향후 5년간(2021~2025)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비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 2020년에 종료되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필요

○ **사회·경제·환경·문화적 여건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건축정책, 건축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제1~2차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변화한 건축정책 여건 파악

– 저출산·고령화 사회,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경제·환경·문화적 여건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정책 필요

□ 계획수립 목적

○ 향후 5년(2021~2025년)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 국내외 건축정책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 설정 및 실천과제 도출

○ 건축정책 성과관리 및 실행력 확보방안 구상

☞ *건축·도시환경이 지닌 문제점과 미래 사회의 새로운 요구 등을 종합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건축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마련*

2.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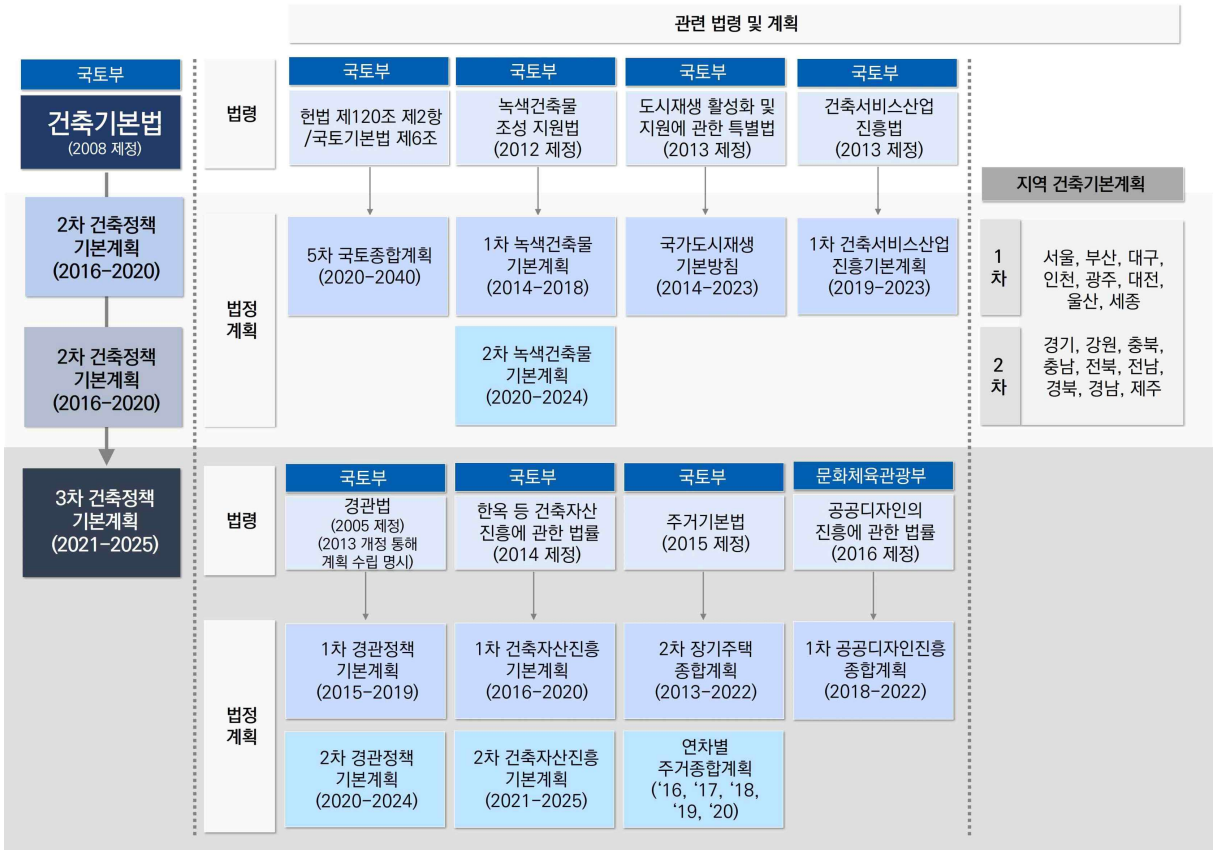
○ 건축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자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의 최상위 계획

○ 건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자 기간 내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하는 실천계획

□ 계획의 위상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다른 건축·도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과는 동등한 위상을 지니며, 건축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

○ 본 계획은 타 법령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지니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안 포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위상과 관련 법 간의 관계]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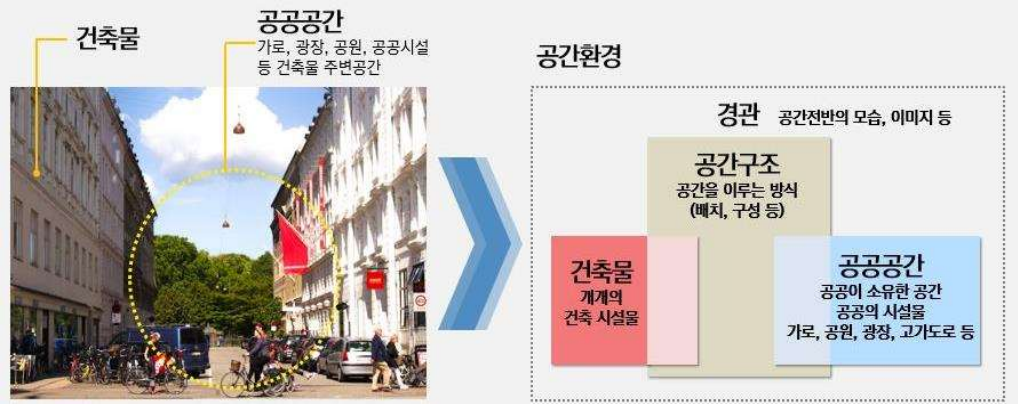
– (중기) 2021~2025년(5년), (장기) 2021~2030년(10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건축물 및 공간환경

– 개별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및 경관을 공간적 범위의 대상으로 함



[공간적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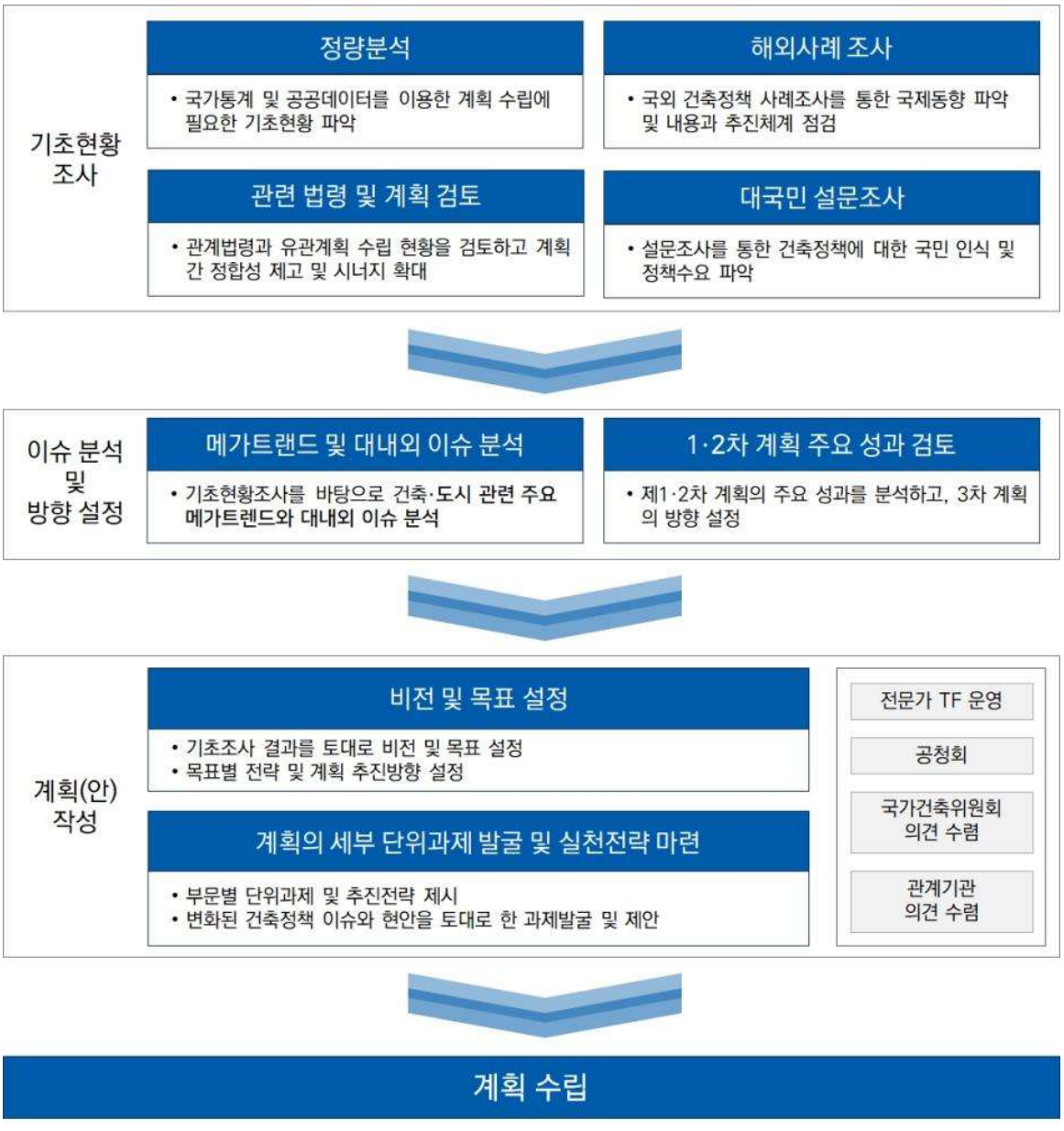
건축기본법 제11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4. 계획수립 과정 및 방법

□ 계획수립 절차

○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을 설정한 후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 및 부문별 목표 도출

○ 1차, 2차 계획 성과점검, 전문가 TF, 국민 의견수렴(설문조사, 공모전), 공청회등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부문별 세부 계획을 도출



[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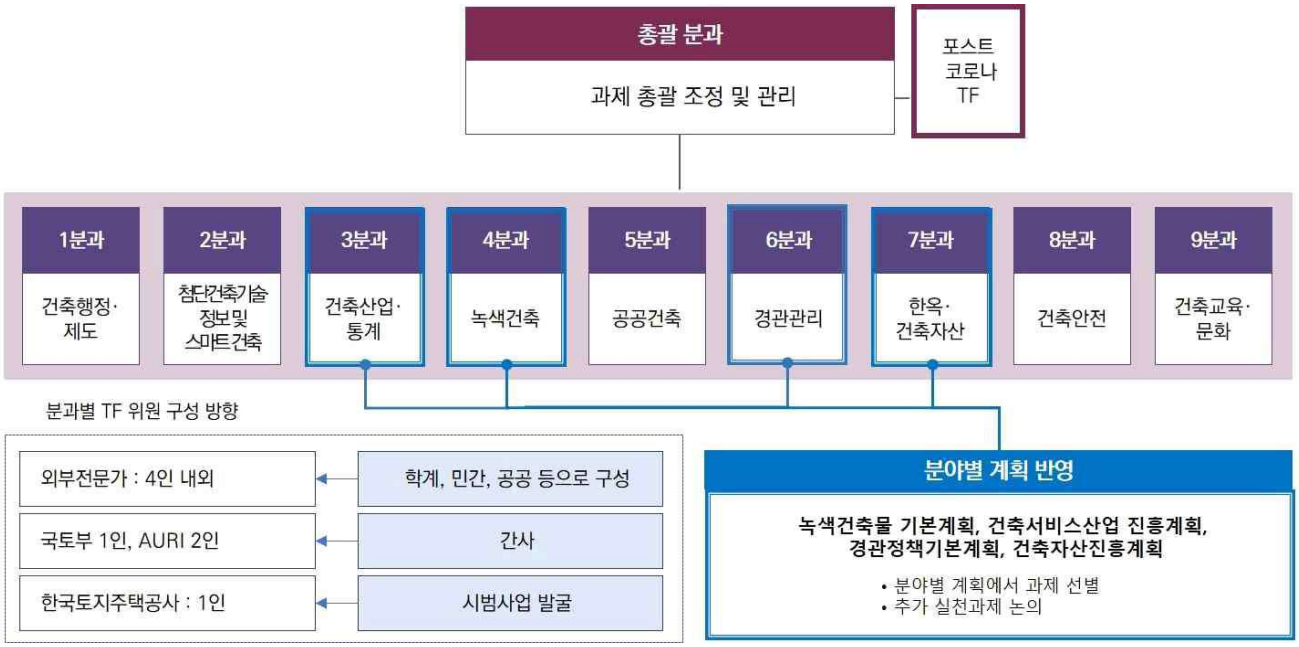
□ 전문가 TF 운영

○ (**TF 역할**)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부문별 실천과제 및 세부단위과제 발굴, 시범사업 계획, 사업별 소요예산 검토 등

○ (**TF팀 구성**) 총 50여명 내외(분과별 8명 내외, 총 9개 분과)

– 건축기본법 제7조~제9조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다루어야 할 건축정책 분야 9개 분야에 대한 TF팀 구성

– ①건축행정·제도, ②스마트 첨단건축기술·정보, ③건축산업·통계, ④녹색건축, ⑤공공건축, ⑥경관관리, ⑦한옥·건축자산, ⑧건축안전, ⑨건축교육·문화 등 9개 분과로 구성·운영



[건축정책기본계획 전문가 TF팀 구성 및 운영체계]

[참고] 제1·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전문가 TF 운영 및 구성

▮ 1차 계획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1분과(건축정책비전 11인), 2분과(국토환경디자인 11인), 3분과(건축경쟁력향상 10인), 4분과(건축문화 진흥 10인) 등 총 42인의 전문가 TF 구성·운영

▮ 2차 계획 전문가 TF팀 구성·운영(사전기획 TF)

–1분과(안전·방재), 2분과(공간복지), 3분과(건축서비스산업), 4분과(건축문화)등 총 40여 명 내외 구성

□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채널 마련

○ 1, 2차 기본계획은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설문조사, 공모전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 (**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여 계획에 참신한 과제를 발굴·반영하고,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 홍보 병행

○ (**전문가 설문조사**) 미래 건축정책에 영향이 있는 메가트렌드 우선순위와 건축계에서 체감되는 분야별 정책 중요도와 시급성 분석

○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건축정책과 메가트렌드 우선순위를 조사해 전문가 의견과 비교·분석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 체계]



구분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인 인식조사
대상	국민	산·학·연·관 전문가 211명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1,000명
방법	온라인 플랫폼 구축	AHP 및 정책우선순위 평가	설문
주요내용	UCC, 포스터, 에세이 등 자유로운 형식의 정책 공모	메가트랜드에 따른 건축 정책 이슈, 건축정책 체감 정도, 건축정책 이슈별 중요도 등 평가	메가트랜드의 건축 정책 영향, 건축정책 체감 정도 평가 등 전문가 인식과 비교·분석
추진기간	8월~12월(계획수립 전과정)	9월	9월

Ⅱ 건축분야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1. 건축정책 주요성과

건축을 **‘민간자산의 건축’ 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합일된 **건축계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

□ 건축정책 역할 및 기능 확대

○ 국가 건축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틀 마련

○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부문별 법정계획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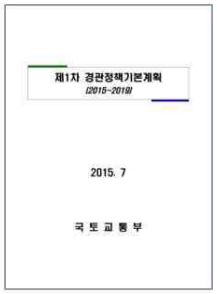
○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선언적으로 표현되었던 다양한 시책들이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되어 계획 실행력 향상

○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관장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을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 형성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건축정책 분야 계획 수립 현황]

	법 제·개정 현황	계획 수립 현황
2007	건축기본법 제정 (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중**
201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2012.2.22. 제정, 2013.2.23. 시행)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20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2013. 5. 22 제정, 2014. 5. 33. 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2013.6.4. 제정, 2014.6.5. 시행)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경관법 전부개정 (2013.8.6. 전부개정, 2014.2.7. 시행)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14-2019)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4.6.3. 제정, 2014.6.4. 시행)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2020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정, 2020.5.1. 시행)	





□ 건축·도시 디자인 향상

○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및 기준 마련

–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 제고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09–’17), 공간환경전략계획(’19~) 지원 등 시민 체감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 우수 건축물 및 전문인력 발굴·관리 확대

– 대한민국 경관대상(’11~), 한옥공모전(’11~), 녹색건축대전(’12~), 신진건축사 대상(’13~) 등을 시행하여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

○ 소규모 건축물부터 초고층, 대형건축물까지 안전기반 확립

– 「건축물관리법」 제정(’19),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1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16),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17) 등 건축물 관리 기반 마련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부실·불법 건축행위 근절

– 건축법 일부개정(16’.2월, ’17.4월)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위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근거 마련(서울, 세종, 안양 등에서 운영 중)

□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및 관리시스템 도입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민센터, 보건소, 파출소 등 공공건축의 기획·설계 내실화를 위한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무화

※ 설계비 1억원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 등 건축기획 절차 규정을 명문화하고,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발주 가이드 개발·배포

○ **민간전문가 도입체계 정착**

– 민간전문가 시범사업('13~'14), 민간전문가 지원사업('15~'18),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18~), 공간환경전략 계획 지원('19~) 등 민간전문가 참여하여 건축·도시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여건 형성

○ **공공건축 범정부협의체 발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19), 공공건축 절차혁신을 통한 디자인 제고, 생활 SOC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공

□ 친환경 및 녹색건축 조성 기반 확대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13) 및 이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에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확산**

–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13),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17),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20) 등 추진

○ **건축물 단열성능 기준 강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

– 단열성능 기준 강화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너지 사용량이 지속 감소(아파트 43%, 단독주택 31% 감소)

□ 건축·도시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지역건축가 활용 및 신진건축사 설계시장 진출 확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17)'을 개정하여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으로 신진건축사들의 설계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 **건축·도시 부문별 전문인력 양성 확대**

–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 양성사업', '스마트시티 인력 양성사업',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별로 전문가 육성 정책 시행

2. 메가트렌드와 건축분야 전망

건축환경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의 핵심요소인 ①인구사회변화, ②기술변화, ③기후환경변화, ④경제변화, ⑤정책규제변화에 대한 대응



[STEEP분류에 따른 메가트렌드와 건축 관련 영역]

[메가트렌드와 미래 건축정책 이슈 분석 방법]

메가트렌드 내용 수집	데이터 수집	국내외 미래 메가 트렌드의 관련 문헌 조사
		건축정책의 현안과 미래 동향 분석 자료
	분야별 이슈 수집	STEEP분류에 의한 활용 주요 동향에 대한 키워드와 내용 정리
▽		
메가트렌드와 건축분야 현안 연계	메가트렌드 선별	메가트렌드 중 건축 분야와 관련된 이슈를 선별
	건축분야 현안 정리	메가트렌드 관련 이슈에서 건축분야의 현재 동향 자료 수집과 파악
▽		
건축정책 과제 적용	메가트렌드에 대한 설문항목과 우선순위 도출	메가트렌드로 인한 미래 건축정책과제 대한 중요성 조사를 위해 대국민, 전문가 설문 항목 도출
	종합과 반영	전체 내용을 분야별 건축정책 전략, 과제도출에 고려하여 건축정책의 과제를 설정

□ 인구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증가와 지역격차 심화**) 인구감소로 빈집증가, 지역쇠퇴가 일어나는 한편, 1~2인 가구 증가로 다양한 주택유형과 커뮤니티 시설 요구

※ 국내 인구는 '28년 5,194만 명에서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9년 29.8%까지 증가(통계청)

○ (**다양한 인구구성 고려한 건축 공간 발굴**)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인구구성을 위한 건축물 수요 증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 공간설계 요구 증대

○ (**가치관 변화**) 52시간 근무제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공공공간, 여가 및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16년 평일 3.1시간, 주말 5.0시간에서 '19년 평일 3.5시간, 주말 5.4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여가 비용 또한 13.6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증가('20,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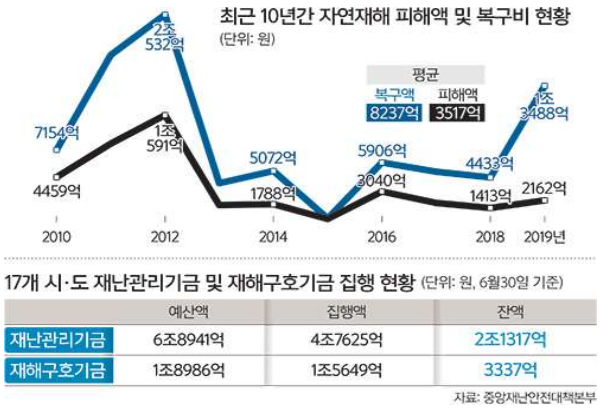
○ (**감염병, 미세먼지 등 재해 증가**) 코로나 19 유행,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 등의 글로벌 재해의 국내 영향 증가로 건축 공간환경도 위험 대비 설계 요구 증대

- OECD 국가 중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어 2010년 이후 8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기후불확실성 증가와 도시영향 증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최근 10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증가추세, 극한기후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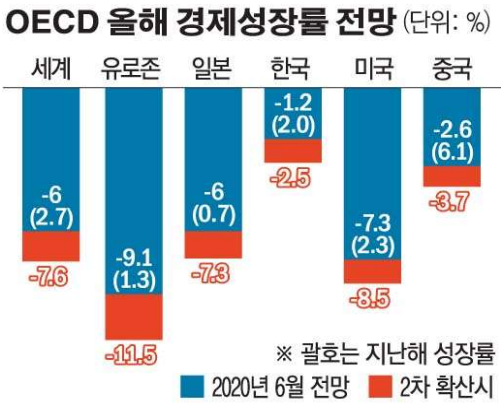
※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은 7월 8월 집계만 1조 371억원, 복구비는 3조4천 277억 원으로 14년 만에 최대 규모 기록(연합뉴스, 2020년 9월 11일자)

○ (**에너지 자원 고갈과 대응 사업의 성장**) 전세계의 신재생 산업 성장 주력, 에너지 저감형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저감을 위한 건축기술 산업 확대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및 복구비]

출처 : 김동욱 외(2020),"역대급 장마에 피해액 눈덩이… 지자체는 코로나로 예산 '막막'", 세계일보, 2020년 08월 13알자.



[코로나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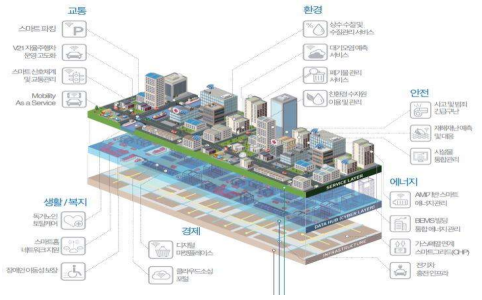
출처 : 김지영(2020), "OECD "올해 한국경제, 코로나19 재확산 시 2.5% 역성장", 이투데이, 2020년 6월 10일자.

□ 기술변화

○ (**스마트시티와 구현기술**)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기술 상용화로 건축분야의 빅데이터 구축과 기술 적용 가속화

○ (**인간중심 기술발전**) 인간 활동을 대체하는 기술인 인간증강기술,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의 기술개발이 건축 분야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적용

※ Grand View Research는 스마트시티의 2025년 규모를 2.5달러로 예측하였고, 국내는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가 2019년 704억 원에서 2020년 1,417억으로 두 배 증가



[스마트 시티에서 적용되는 기술 분야]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p6.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

출처 : 국토교통부(2018).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2018년 11월 7일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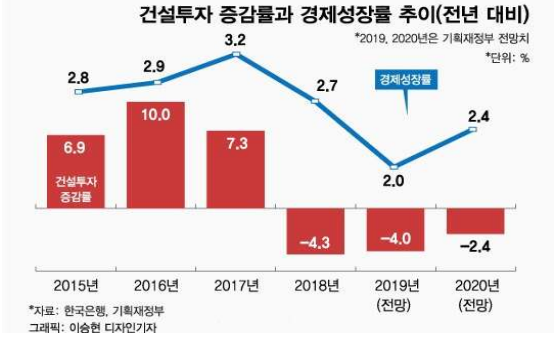
□ 경제변화

○ (**저성장 장기화와 소규모, 리모델링 건축시장 확대**) 선진국의 경제 성장둔화와 저성장 지속으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건축물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등 건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 건축산업은 건설산업의 66%를 차지하며, 이는 토목의 4배, 전자 산업의 0.9배, 자동차산업의 1.03배 규모로 이미 거대 내수 시장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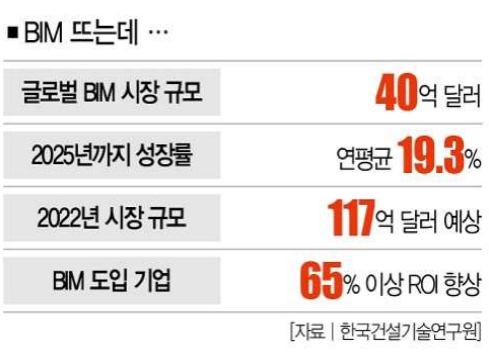
* 건축주 직영공사(30조원 추산)를 제외하고도, 계약액 245조원, 기성액 172조원 규모('16)

○ (**건축산업 구조의 양극화 현상**) 대형 및 소형 건축사무소의 양극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건축 시장 양극화에 대비한 건축산업 체계 정비 필요



[건설투자 증감률과 경제성장률 추이(전년대비)]

출처 : 최성근(2019). 건설투자 포기한 내년 2.4%성장률, 이게 최선입니까,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30일자.



[건축 BIM 시장의 성장 전망]

출처 : 김다린(2019). "[건설왕국의 역설] 여태껏 2D 도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 리더스쿠프, 2019년 07월 11일자.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법제·규제

○ (**행정·시스템 혁신**) 행정시스템의 데이터 클라우드 구축과 디지털 시스템 구현 활성화, 건축 분야의 행정 데이터와 시스템도 디지털 고도화 요구

○ (**건축행정체계 개편 및 규제완화**) 건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축 시장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 필요

※ 2020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목표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전략은 경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민생혁신으로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 공직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제안[1)]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개요]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행안부, 디지털정부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 서두른다", 2020년 1월 22일자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소개]
출처 : 건축데이터개발 사이트 소개 (주소: http://open.eais.go.kr/), 접속일자 2020년 9월 21일자

□ 포스트 코로나와 그린뉴딜 정책

○ (**포스트 코로나의 도시 및 건축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위한 도시 밀도 패러다임의 변화 및 기존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서비스 창출 요구

– (**감염병,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환경을 정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재해·재난 안전 건축물 조성**) 이상기후 증가로 인한 폭염, 폭우 등 극한기후발생 빈도가 증가, 재해·재난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건축물 필요

○ (**그린뉴딜과 그린리모델링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한 사업 지속 필요

1) 국무조정실(2020), 20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2p.

3. 대국민 및 전문가 건축정책 인식 분석

□ 설문조사개요

○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정책 체감도와 건축정책 분야별 과제 중요도 및 시급성을 평가해 정책기초자료로 이용

[대국민 및 전문가 건축정책 인식 조사]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3">조사 개요</td><td>방법</td><td colspan="3">• 설문 조사 설문지를 활용한 On-Line 조사</td></tr>
<tr><td>기간</td><td colspan="3">• (일반인) '20년 9월 2~7일, (전문가) '20년 9월 3~14일</td></tr>
<tr><td>대상</td><td colspan="3">• 일반국민 1,000명 및 건축·공간분야 전문가 211명</td></tr>
<tr><td rowspan="10">주요 조사 내용</td><td>구분</td><td>설문지 내용</td><td>국민</td><td>전문가</td></tr>
<tr><td rowspan="2">건축 정책 체감 정도</td><td>① 최근 10년간 건축업계, 건축물, 공공 공간 환경 개선도</td><td>○</td><td>○</td></tr>
<tr><td>② 최근 10년간 건축물 및 공간 환경 개선도</td><td>○</td><td>○</td></tr>
<tr><td rowspan="4">메가 트렌드에 따른 건축 정책 이슈 평가</td><td>③ 메가트렌드별 건축 정책 영향 정도(순위문항)</td><td>○</td><td></td></tr>
<tr><td>④ 메가트렌드별 건축 정책 영향 정도(쌍대비교)</td><td></td><td>○</td></tr>
<tr><td>⑤ 현재 건축정책에 메가트렌드 영향 정도</td><td></td><td>○</td></tr>
<tr><td>⑥ 미래 건축정책에 메가트렌드 중요성</td><td></td><td>○</td></tr>
<tr><td rowspan="3">건축 정책 이슈별 중요도 평가</td><td>⑦ 좋은 건축물 만들기 위한 건축 분야별 정책 중요도</td><td>○</td><td></td></tr>
<tr><td>⑧ 건축분야 산업 및 정책 발전을 위한 건축 분야별 정책 중요도</td><td></td><td>○</td></tr>
<tr><td>⑨ 건축 분야별 정책 시급도</td><td></td><td>○</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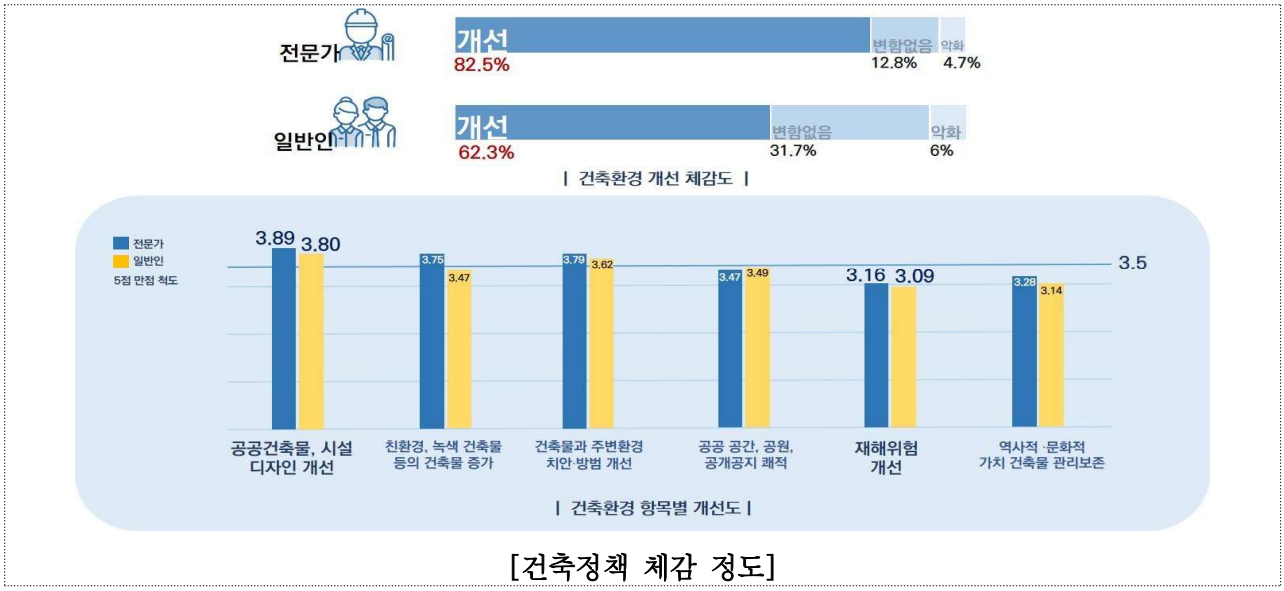
□ 건축정책 체감 정도

○ 최근 10년간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산업, 건축물 및 공공공간 환경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보다 전문가집단에서 보다 개선되었다고 인식

-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건축물의 재해 위험부문에 대해 개선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분야의 정책마련 시급

–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가장 차이나는 분야는 녹색건축 항목으로 전문가는 71.6%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은 53.0% 수준



[건축정책 체감 정도]

□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정책 이슈 평가

○ 메가트렌드 5개의 분야 중 건축정책에 가장 영향이 많은 분야로 일반 국민은 '인구·사회', 전문가는 '인구·사회'와 '기후·환경' 분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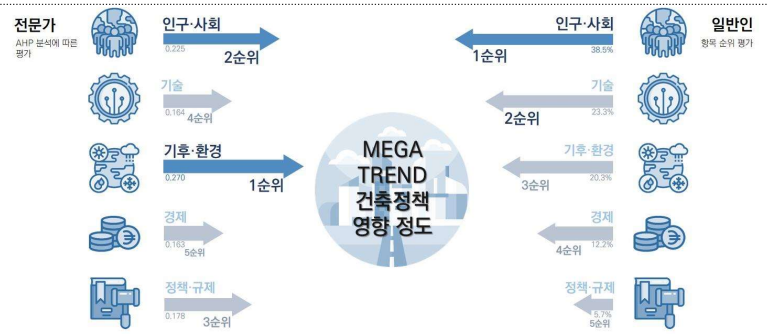
○ '정책·규제'의 경우 일반국민은 가장 순위가 낮았지만, 전문가는 3순위로 나타나 정책·규제 이슈는 전문가가 체감하는 영향이 큰 부문으로 인식

– 일반국민은 메가트렌드 중 1순위로 '인구·사회'가 38.5%로 영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술'(23.3%), '기후·환경' (20.3%), '경제'(12.2%), '정책·규제'(5.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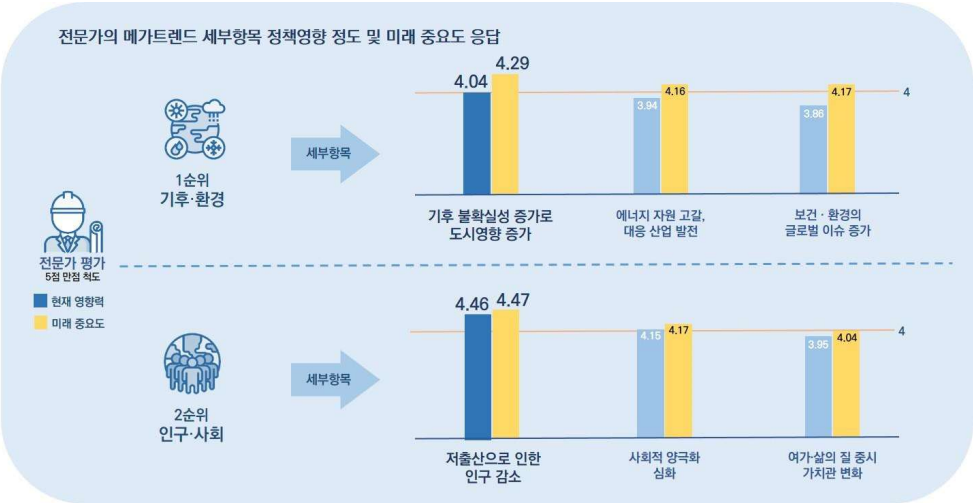
– 전문가는 쌍대비교 방식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후·환경'의 중요도가 0.27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구·사회'(0.225), '정책·규제'(0.178), '기술'(0.164), '경제'(0.163) 순

○ 전문가 대상으로 현재(2020년) 영향력과 미래(2030)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기후 불확실성 증가로 도시영향 증가', '사회적 양극화 심화'가 현재와 미래의 건축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

– 기후·환경분야의 모든 항목이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중장기적인 과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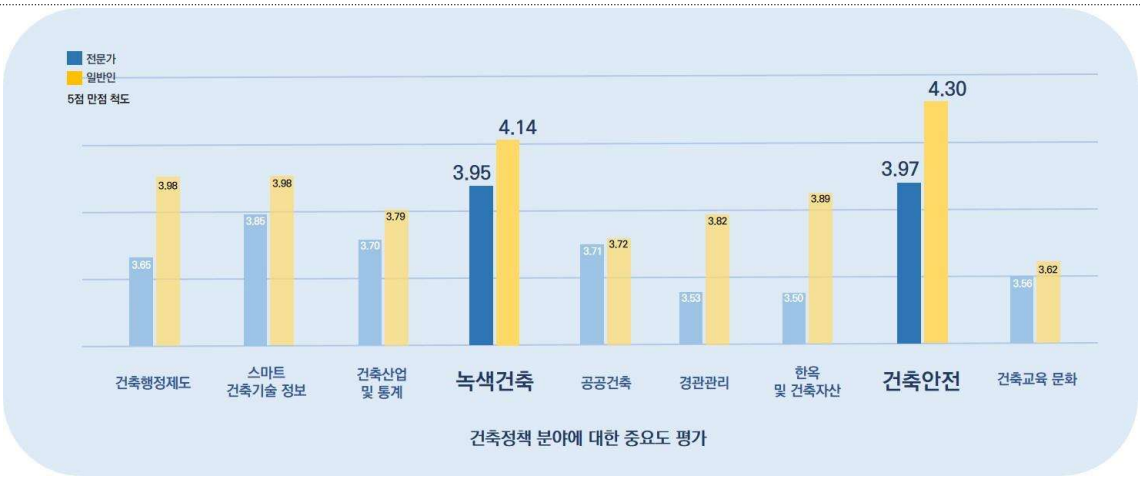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메가트렌드별 건축 정책영향 정도 응답]



[전문가의 메가트렌드별 건축 정책영향 정도 및 미래 중요도 응답]

□ 건축정책 이슈별 중요도 평가

○ 9개 건축분야 이슈 중 국민과 전문가 모두 ‘녹색건축(국민 4.14/전문가 3.95)’ 분야와 ‘건축안전(국민, 4.3/전문가 3.97)’분야를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인식



[일반인 및 전문가 건축정책 분야에 대한 중요도]

4. 건축분야 현안 및 계획방향

□ 공공건축 생산과정 혁신 및 지역 인프라 구축

○ 공공건축사업 전담부서가 없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며 유사기능 중복, 시설간 연계 미흡 등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

– 지자체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등 정책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총괄·공공건축가의 기능 및 역할, 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 그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왔으나 사전검토 대상 확대 등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가 필요하며, 국가–지역 센터간 역할 정립 필요

○ 기존 공공건축 품질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은 건축기획–설계 단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사후설계관리 문제 등 시공 단계 품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 정착 및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 도시와 건축이 통합계획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그간 토지이용을 다루는 2차원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이루어져 통합적인 공간환경 조성 미흡

–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입체적 공간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개발계획 확정

– 건축물, 도로, 가로시설물, 조경시설 등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체 도시공간의 구조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 초래

○ 각 부처에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확대 적용할 필요

☞ *"도시와 건축을 통합하여 구현하는 도시건축 통합계획"*

* '도시설계 통합계획'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선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기법

□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의 지속적 노력

○ 그동안 건축자산에 대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래자산으로의 보존이 아닌 부동산 수익 등이 우선되면서 파괴적 개발이 빈번히 발생

-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와 같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과 연계 가능한 관련 사업 증가
- 건축 과정에 대한 민간건축주·발주자의 지식이 제한적이고 건축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설계·건축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발생
- 일상 속 건축·도시공간 환경을 주도적으로 가꾸는 시민 역량의 중요성 증가

○ 건축자산의 무분별한 가치 훼손 및 멸실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민간건축주·발주자의 건축문화 인식 함양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근현대 건축자산관리 체계화 및 건축문화교육의 확대"*

□ 민간부문 건축물까지 녹색건축 확대 적용

○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녹색건축 성과를 넘어서 민간 부문의 건축물까지 확대 요구 증대

- 기존건축물 부문에서 신축 부문보다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에너지성능이 취약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필수
- 정부주도형 중심으로 녹색건축 정책이 진행되면서 자발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문화가 정착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 녹색건축 전문인력 부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열성능을 강화해 왔으나 설계, 시공, 자재, 설비, 유지관리 등 관련 기술 및 시장 등 산업기반 부족

○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의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방안 필요

☞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 새로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안전관리 규제 및 지원 제도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새로운 감염병 등장 등 피해 확대

– 코로나19 감염관리 계획이 미흡한 건축물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신체약자 이용 건축물 등 감염병 취약 건축물의 대응조치 마련 요구 확대

– 이상기후 장기화로 산불, 폭염, 폭우 등의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건축물 피해도 커지는 상황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 과정에서 각종 재해·재난 관련 과학적 분석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해 안전성능을 향상시킬 필요

☞ *"불확실한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자발적 안전관리 필요"*

□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 및 도시환경 개선

○ 장기방치건축물에서 자살, 비행청소년 유발, 보행자 통행안전, 관리자 부재로 인한 자연재해 무방비,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위반건축물도 불법영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위협

– 빈집 및 저이용 유휴공간 발생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심 공동화로 인한 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문제

– 노후화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우범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등 주거복지사업이 필요

○ 지역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차단 및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필요

☞ *"빈집, 방치 및 위반건축물 등 지역 안전위협 요소 제거를 위한 환경 정비"*

□ 동네 소규모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산업 혁신

○ 소규모 건축시장이 건축산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는 중대형 규모의 건설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

* 66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약 90%를 차지하며, 건축허가 건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건축공간연구원, 2018)

–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기획업무 부실, 설계의도구현 적용 미흡, 발주자의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

– 민간건축물은 건축주 직접시공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시공, 품질 보증을 위한 성능기준 부재 등의 문제 발생

○ 소규모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역량 있는 소규모 시공업체 육성 필요

☞ *"소규모 건축시장 개선으로 동네건축 품질 제고"*

□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건축규제 혁신

○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로 인해 우수건축물 양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효율적 건축행정 개선 필요

– 현행 건축 인허가는 건축물의 성능 확인 및 설계안의 적법성 검토가 아닌 설계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문제

– 심의위원 간 의견이 상이하거나, 지역 및 지구에 따라 심의결과가 달라지는 등 비효율적인 건축행정이 지속적으로 운영

– 도시계획심의 등 타 법령에 의한 다양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심의중복 및 상이한 심의의견 등 행정적 소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한국건축규정 공고, 인증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통합운영, 건축 인허가 및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확대 등 건축규제 혁신 필요

☞ *"좋은 건축 조성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심의제도 등 건축행정 선진화"*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과 신산업 창출

○ ICT 기반 첨단기술의 발달, 신소재 기술 융합발전 등으로 건축과 도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건축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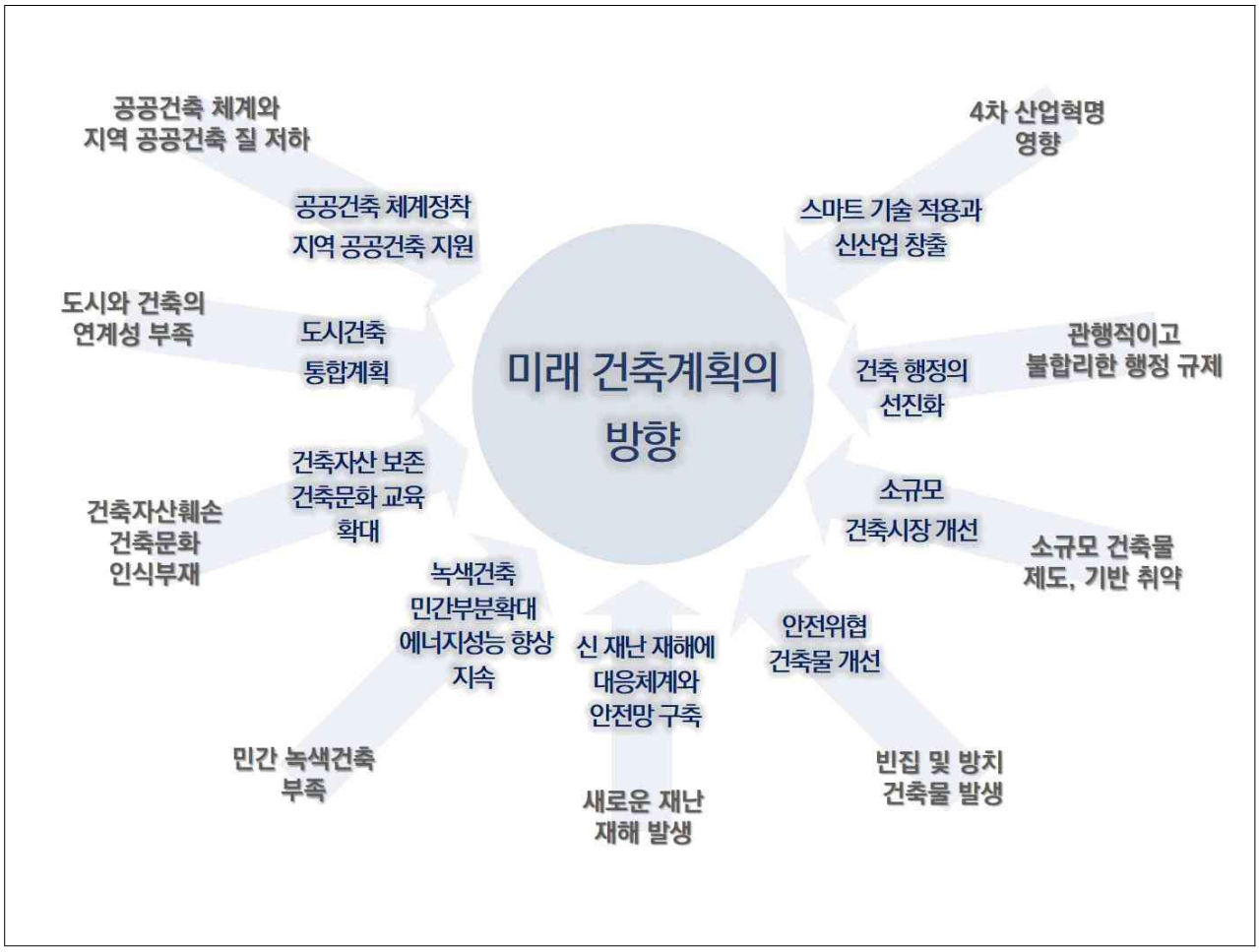
– 스마트홈 설계 등 주거환경과 결합된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AI나 AR·VR과 같은 기술이 건축 산업에 확대 적용될 전망

– 데이터 3법* 개방 등으로 인하여 건축정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정보 누락, 입력 오류에 의한 이상 수치 등 정보 신뢰성 및 품질 저하 문제 해결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 빅데이터를 구축 및 고도화하고, 첨단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건축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확대 필요

☞ *"첨단 건축기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정보 개방 확대"*



Ⅲ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1. 비전 및 정책목표

□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

○ 대형건설회사를 통한 소품종·대량생산 중심의 고속성장의 시대에서 지역기반 소규모 건축산업를 통한 다품종·소량생산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시대로 전환

○ 사회·경제적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의 생산방식, 작업방식, 공간수요, 개발행태 등이 대규모 개발에서 소규모 필지 중심의 도시구조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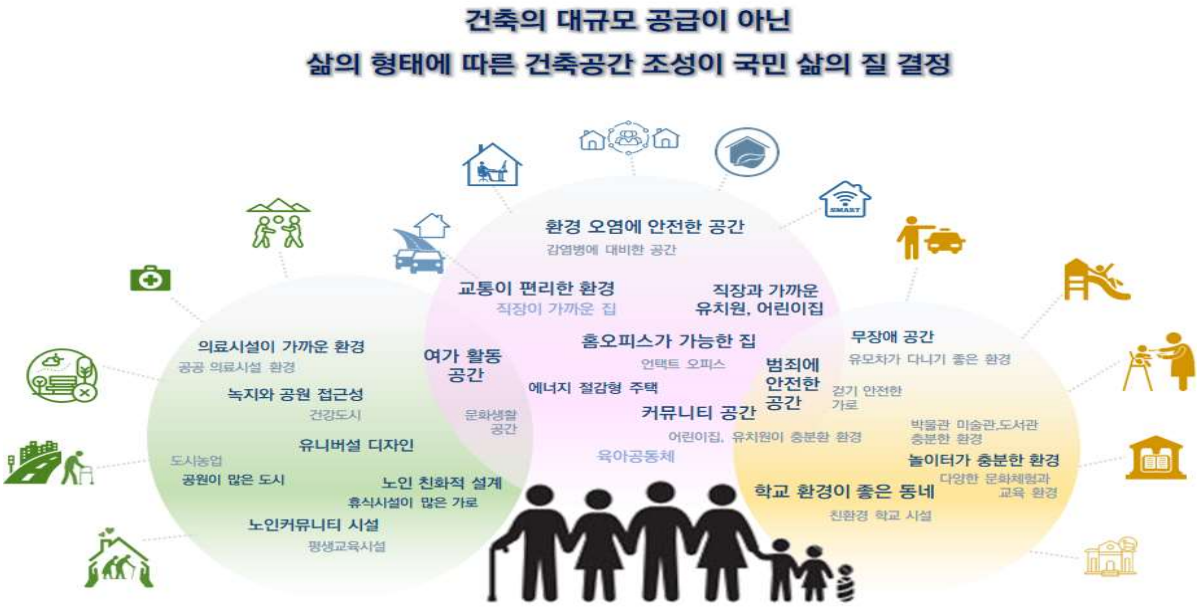
☞ 건설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건축이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로 전환



□ 건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사회변화

○ 건축의 대규모 공급이 아닌 국민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따라 건축공간이 조성되어야 국민 삶의 질 향상 가능

– 국민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공건축, 생활 SOC시설의 접근성이 좋고, 도시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며,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건축 자체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생산방식도 개선되고, 건축 성능과 품질 향상 필요



□ 건축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분야

◈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제2장, 제7조~9조)인 **'건축의 공공성'**에 따라 **9개의 건축정책 분야** 도출

○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건축정책

○ (**사회적 공공성 확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 및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축정책

○ (**문화적 공공성 실현**)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건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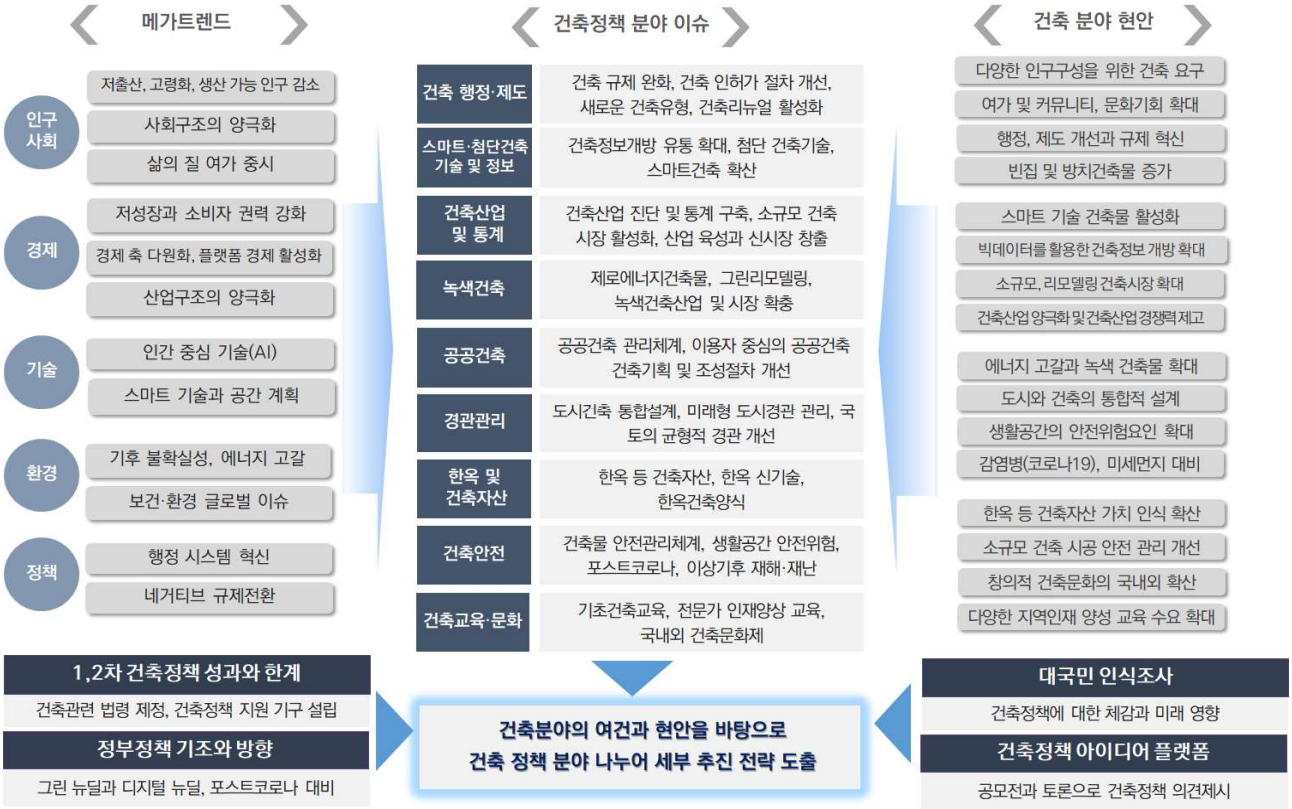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정책 분야]

□ 메가트렌드와 건축분야 현안을 고려한 정책 세부이슈

○ (**메가트렌드 고려**) 인구사회, 경제, 기술, 환경, 정책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따른 국내외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 고려

○ (**건축분야 현안 이슈**) 최근 건축분야에 제기되는 현안문제, 미래 여건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현안과 이슈 고려

○ (**건축정책 분야 세부 이슈**) 9개의 건축정책 분야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정책 키워드 도출



[메가트렌드와 건축분야 현안에 대응한 분야별 정책 이슈]

□ 비전과 정책목표

▌(비전 및 정책목표) 제3차 건축정책의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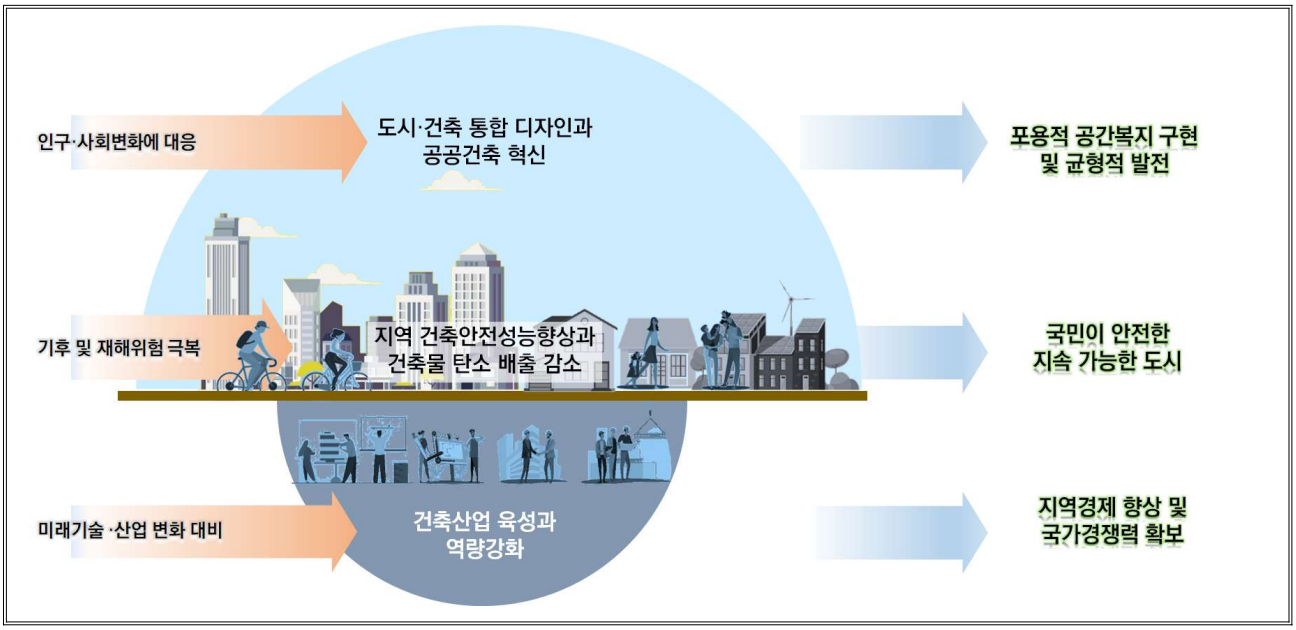
▌(추진전략)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현재 9개 TF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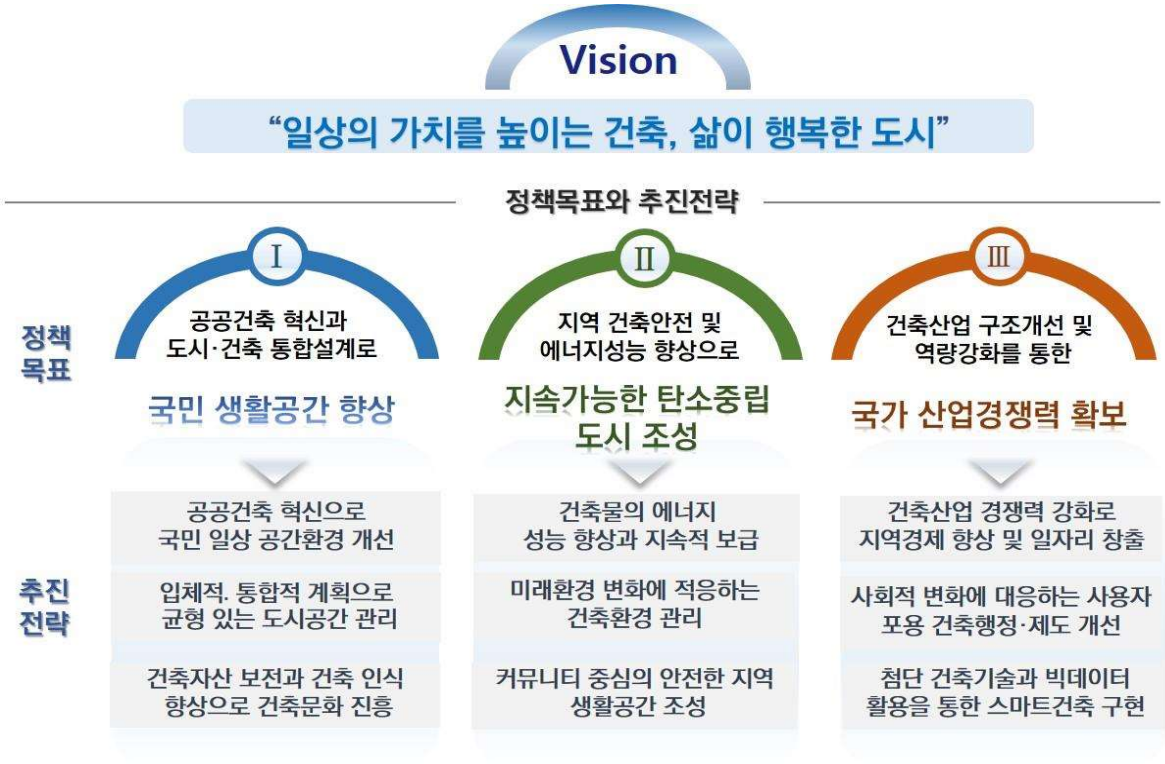
▌(실천과제와 세부단위과제)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 도출

○ (비전)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 (일상의 가치) 소규모 동네 건축 품질 및 디자인 향상, 건축산업 신뢰성 확보

– (행복한 도시) 시민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 미래세대와 환경이 배려된 스마트도시 구현





○ (기대효과) 공공건축 만족도 향상, 건물부문 탄소배출 25% 저감, 건축산업 규모 240조원까지 확대

2. 목표별 실천과제 및 주요내용

정책목표 1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 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향상하고, 건축 도시 통합계획 으로 국가 및 도시이미지 향상과 함께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실천과제	세부단위과제	과제 주요내용
추진전략 1.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 개선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 및 생산과정 혁신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디자인관리체계 정착	▸ 건축기획 업무 정립 및 제도 정착 ▸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및 실행 투명성 확보 ▸ 시공 단계 공공건축 품질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 확립
	공공건축 발주 역량 강화 및 전담기구 확대	▸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정착 및 운영 효율화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정립 및 설립 확대
공간복지 거점으로서 공공건축 관리 강화	소규모 공공건축 품질 확보	▸ 소규모 건축설계 발주 정상화 ▸ 설계의도구현 제도 정착
	공공건축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공공건축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지역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 학교건축 등 공공건축을 활용한 지역거점 육성
추진전략 2.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		
건축과 도시가 소통하는 열린 도시 구현	도시건축 통합설계 관련 제도 개선	▸ 도시·건축 통합계획 제도화 및 확산 ▸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 통합계획 특례 활성화 ▸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및 활성화로 통합경관 형성 ▸ 소규모 블록 중심 주거지조성 활성화를 위한 법규 개정 ▸ 장소기반 도시설계 기법 개발과 조직 및 교육 정착
	생활밀착형 도시경관 개선	▸ 인지건강디자인 가이드 마련 및 적용 확대 ▸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향상 ▸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변부 가로경관 개선 제도 마련 ▸ 개방발코니 설치 활성화
미래형 경관을 대비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	도시와 비도시 간 경관 불균형 해소	▸ 비도시지역의 건축경관 관리체계 개선 ▸ 경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유도 ▸ 비도시지역 관리방안과 소외지역 경관 관리
	신기술을 활용한 3차원 경관관리	▸ 미래형 도시 경관영향요소 예측 및 관리방안 마련 ▸ 경관심의에서 신기술 활용방안 검토 ▸ 경관포털 정보 구축 및 운영
추진전략 3.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 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		
건축자산 체계 확립과 정책지원으로 보전·활용 활성화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규제 및 지원수단 다양화	▸ 건축자산 지원수단 현행화 및 신규 인센티브 마련 ▸ 건축자산의 합리적 건축기준 및 대체성능 기준 개발 ▸ 건축자산 전담조직 및 지원기구 설립·운영
	건축자산의 공신력 있는 통계 생산과 시민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	▸ 건축자산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및 지속적 조사체계 구축 ▸ 건축자산 관련 민간단체 구성·운영 및 홍보콘텐츠 발굴
	건축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체계 확립	▸ 지역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의무화 ▸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절차 및 가이드라인 개발
건축문화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로 건축문화 진흥	대상별 맞춤 건축교육을 통한 시민 인식 확대	▸ 어린이·청소년 기초건축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 ▸ 일반인 건축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건축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건축교육·문화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확장성 증대 ▸ 건축교육·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발판 마련
	건축자산 체험 기회 확대로 인식 확산	▸ 한옥건축양식 모델 개발 및 확산 ▸ 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확대

정책목표 2 지역 건축안전 및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 빈집, 방치건축물 등 유휴공간의 관리 및 활용, 지역 생활안전환경 구축, 기후변화 및 감염병 대응 등 건축의 에너지 및 안전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정

실천과제	세부단위과제	과제 주요내용
추진전략 4.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및 운영관리 강화	건축물의 에너지최적화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 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설계 지원체계 구축 ▸ 에너지최적화 운영·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 ▸ 녹색건축물 건설 역량 제고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실행력 제고 ▸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 에너지효율 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성능관리 기준 마련
그린리모델링과 재원 확보로 녹색건축 보급 확대	녹색건축 재원 마련 및 경제성 제고	▸ 녹색건축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모델 개발 ▸ 녹색건축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 탄소중립 커뮤니티 조성 기반 마련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공공부문 선도형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지원 및 유도
추진전략 5.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건축물 안전성능 향상	신축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안전기준 강화	▸ 화재 취약 건축물 대응 전략과 자재 화재성능 개선 ▸ 건축물 내진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 대응력 제고
	건축물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마련	▸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전담조직 활성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관리 및 실내환경 개선
신 재난 상황에 적응하는 건축·공간 환경 재정비	재난 대응 임시주거시설 조성	▸ 자연재해 취약건축물 및 임시주거시설 계획기준 마련 ▸ 단계별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운영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예방기능 향상	▸ 건축물 유형별 감염병 예방 계획기준 마련 ▸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추진전략 6.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		
지역 동네 안전 및 공동체성 회복	지역 공동체 거점공간인 동네 소규모 공공건축물 성능향상	▸ 소규모 건축 공사 세부규정 마련 및 안전강화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활성화 ▸ 소규모 건축물 안전 자가점검체계 마련 ▸ 기후변화·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성능향상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구축	▸ 범죄예방설계(CPTED) 확대 적용 ▸ 생활안전 실내 환경 개선 사업 ▸ 미세먼지에 따른 건축물 기밀기준 마련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저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	▸ 거점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 SOC 복합화 ▸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빈집 및 유휴공간의 관리 및 활용	▸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 위반건축물 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 지역 빈집 및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정책목표 3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 건설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소규모 건축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건축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혁신과 불합리한 규제 및 행정제도 개선으로 4차 혁명시대에 선제적 대응

실천과제	세부단위과제	과제 주요내용
추진전략 7.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건축시장 역량 강화 및 산업 확대	동네 소규모 건축산업 구조 개선 및 신뢰성 확보	▸ 우수한 소규모 설계·시공업체 등록제도 도입 ▸ 지역 건축가 및 소규모 시공업체 매칭 시스템 개발·운영
	건축산업의 혁신을 통한 시장 확대	▸ 건축물 유지·관리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신기술 융복합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
	건축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여건변화에 대응한 타 산업 융복합형 연계사업 발굴 ▸ 건축스타트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건축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진흥을 위한 통계 구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등 건축산업 재정립 ▸ 건축산업 국가승인 통계화 ▸ 건축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 해외진출 현황 진단 및 국가별 전략계획 수립 ▸ 패키지형 해외진출 모델 개발 및 유형별 지원사업 추진 ▸ 건축산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 및 지정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건축표준계약 모델 개발
추진전략 8.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포용 건축행정·제도 개선		
합리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 및 관련 제도 이해 증진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문성 확보 및 개선	▸ 건축 관련 인증제도의 단계적 통합 ▸ 건축허가 단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건축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한국건축규정 공고 및 운영방안 마련 ▸ 사용자 친화적 건축규정 정보 서비스(e-KBC) 고도화 ▸ 건축법령 체계 재정비 및 안내 방안 마련
새로운 건축 수요변화 대응 및 건축투자 활성화	건축산업 통합재정 확보 근거 마련	▸ 건축관련 특별회계 제도 개선 ▸ 건축 관련 개별 법령 별 재원 운영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 및 기준 개선	▸ 산업활동의 복합·다양화에 맞춘 용도체계 통합·조정 ▸ 복수용도 인정기준 및 용도변경기준 개선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개선 ▸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적 불부합 개선 및 정리
추진전략 9. 첨단 건축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건축 구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 빅데이터 구축	건축정보 사용성 향상 및 시스템 고도화	▸ 건축정보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정보 품질 제고 ▸ 클라우드 세움터 구축 등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고도화
	건축정보 통합 허브 구축 및 유통 강화	▸ 건축 마이데이터 등 건축정보 허브 구축 ▸ 단계적 건축도면정보 개방 확대 ▸ 건축물 BIM 도면 및 라이브러리 구축
첨단 건축기술로 건축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확대	스마트 건축 및 첨단기술 확산 기반 조성	▸ 첨단 기술의 현장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첨단 기술시장 육성 및 성과 확산 ▸ 스마트 건축 인증 및 스마트 시티 연계 시범사업
	건축 전문교육을 통한 건축역량 강화	▸ 스마트건축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 기존 전문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Ⅳ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정책목표1.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 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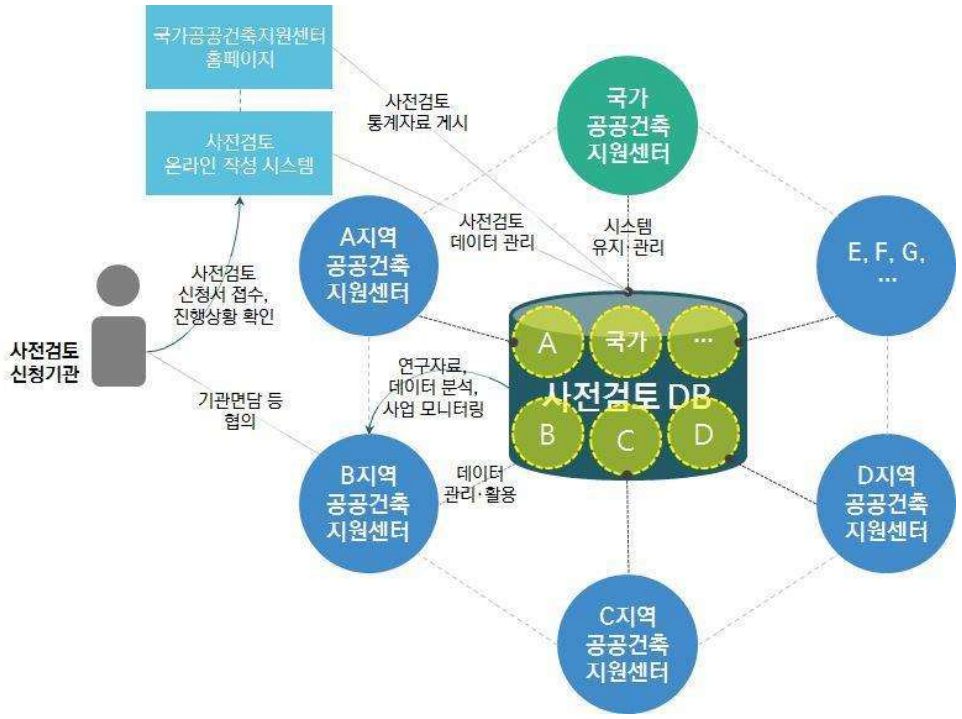
추진전략 1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 개선

실천과제 1.1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 및 생산과정 혁신

□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디자인관리체계 정착

○ (**건축기획 업무 정립 및 제도 정착**) 공공건축 건축기획 의무화에 따라 공공건축 기획 업무 수행 주체, 업무내용, 대가 등에 대한 기준 정립

–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절차 정착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 진행, 통지 절차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역 사업계획 사전검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



[사전검토 DB 시스템 및 온라인 작성 시스템 개념도]

○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및 실행 투명성 확보**) 사업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지명공모, 제한공모 등 건축설계공모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타 분야 전문가도 공동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 개선

※ 설계공모에 대한 투명하고·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결과를 세움터로 일원화하여 공개하는 방안 검토

○ (**시공 단계 공공건축 품질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 확립**) 공공건축 시공과정에서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건축사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성과평가 제도 마련 및 운영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건축사업의 99%는 200억 원 이하 사업으로 사후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공건축특별법(안) 제21조(성과평가)

① 공공기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제공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내용·방법,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건축 발주 역량 강화 및 전담기구 확대

○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정착 및 운영 효율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기능 등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 및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 '범정부협의체(실무협의체 포함)등을 구축해 사업특성에 맞는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2020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안)]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정립 및 설립 확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센터 설치에 필요한 업무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건축기획, 설계공모 등을 지원하는 등 국가–지역 센터 간 역할 정립과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확대**

실천과제 1.2 공간복지 거점으로서 공공건축 관리 강화

□ 소규모 공공건축 품질 확보

○ (**소규모 건축설계 발주 정상화**)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사업의 80% 이상이 설계비 5천만원 미만임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검토

○ (**설계의도구현 제도 정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예산편성 지침에 대가기준 반영

*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14.6)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서울시에 한해 시행 중

□ 공공건축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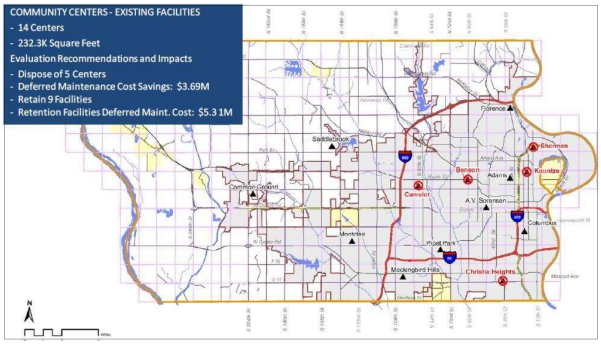
○ (**공공건축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공공건축물의 조성, 평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 공공건축의 조성 현황에 관한 사항,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에 관한 사항, 지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 설계자 및 시공자에 관한 사항 등

○ (**지역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지역별 공공건축 실태 및 향후 수요를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유지·관리 전략을 담은 통합계획* 수립

* 노후 공공건축물의 증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자체 수요변화 및 재정 여건 등에 대응

▌오마하 공공시설 마스터플랜 City of Omaha: Public Facilities Master Plan)



[커뮤니티 센터 현재 위치와 재배치 필요 센터 현황]

-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 내 토지이용과 인구변화를 예측하여 도시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고용과 서비스 수요 변화를 예측
- 공공시설의 수요, 관리비용, 고용인력 등을 예측하고 재배치 계획 수립

○ (**학교건축 등 공공건축을 활용한 지역거점 육성**) 지난 학교건축 혁신사업의 학교 공간 개조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재생을 목표로 사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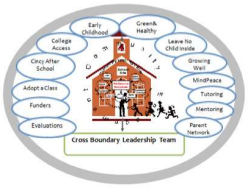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 교육청의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연계

*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사업 추진하여 ’21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8.5조원을 투입하여 2,835동 추진 예정(`21년 국비 943억원 반영)

*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을 추진,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24년까지 235개교 추진 예정

▌신시내티 교육청 “Community Learning Centers”





[신시내티 커뮤니티 런닝 센터 전경과 비전]

출처: 신시내티 커뮤니티 런닝 센터 홈페이지(clcinstitute.org)

- 신시내티 교육청에서는 10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포함해 공립학교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 2002년 신시내티 공립학교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 공공사업을 위한 채권 발행을 통해 진행되었고, 지역학습센터, 건강클리닉, 보육시설을 건축

추진전략 2 입체적 · 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

실천과제 2.1 건축과 도시가 소통하는 열린 도시 구현

□ 도시건축 통합설계 관련 제도 개선

○ (**도시·건축 통합계획 제도화 및 확산**) 도시-건축 통합 계획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 업무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마련 검토

–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3차원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토지이용, 용도지역, 필지별 밀도 규정, 건축선 지정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공간환경의 질과 관련된 내용은 유도기준으로 제시되어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미흡

▌도시건축 통합계획

·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지구단위·건축계획 등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



○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 통합계획 특례 활성화**) 독창적인 건축 설계 및 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구역 지정 조건 및 완화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

–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을 2개 대지에서 3개 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결합건축기준 완화 적용으로 도시재생사업 등 활성화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

- (목 적)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해 도입
- (대 상) 혁신도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관광단지(특구) 등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특 례) 건축법령 및 일부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완화·통합 적용
  - (배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완화)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내화구조, 방화벽,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통합)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의 설치

▌특별건축 구역 사례: 잠실진주아파트)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형 순응형 주거지 배치, 주요 경관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 등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동주택 계획을 제시



[잠실진주아파트 투시도(좌), 조감도(우)]

○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및 활성화로 통합경관 형성**) '역량있는 경관전문가DB(가칭)'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경관관련 공공사업 기획·시행 시 경관 관련 전문가 참여 활성화 등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확대

※ 경관분야 민간전문가 업무 구체화 : 관련조직·부서간 경관관련 업무 통합·조정 및 경관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담당자·전문가 등의 협업방안 마련

○ (**소규모 블록 중심 주거지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주택 배치 및 블록 사이즈, 부대·복리시설, 완충녹지, 소방도로, 공동주택 관리 의무대상 등 지역연계를 고려한 소규모 주거 활성화 및 관련 법제도 개선

○ (**장소기반 도시설계 기법 개발과 조직 및 교육 정착**) 장소 선정, 장소 유형화, 개별 장소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소규모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및 적용

– '장소와 관련된 주요 분야별로 전문직을 채용하거나 도시환경 개선에 관여하는 각 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성 강화

▌장소기반 도시설계 유형화 및 설치기법 예시

-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구로구를 대상으로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시뮬레이션 수행
- 전략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유형을 총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설치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개별장소 개선을 통한 장소 네트워크 조성 과정 시뮬레이션 수행



[구로구 장소기반 전략계획 시뮬레이션을 위한 장소 유형화 및 설치기법 예시]

□ 생활밀착형 도시경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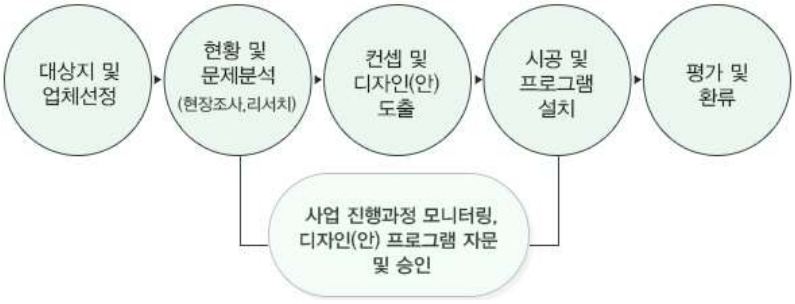
○ (**인지건강디자인 가이드 마련 및 적용 확대**) 건축물 내·외부, 공원 등 노인모임 구역, 노인 보호구역의 보행로 등에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이나 치매 환자 등을 위해 기존의 익숙한 주거 환경 디자인을 변형해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

–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지건강디자인 확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서울특별시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인지건강디자인의 대상 및 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적용사례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범사업 진행 중
- 2014–2018년까지 총 5곳의(양천구 신월동, 영등포구 신길동, 노원구 공릉동, 송파구 마천동,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임대아파트,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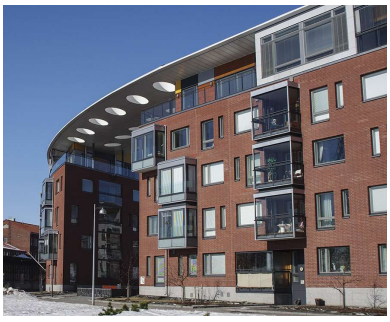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절차]

○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향상**) 건축물 및 도시의 안정감을 저해하는 낡은 옹벽, 외진 골목길, 교각 하부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지역민의 정서적 만족함 향상

– 주거시설,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 일상생활 공간이나 공공시설물, 소규모 SOC 시설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시설의 경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변부 가로경관 개선 제도 마련**) 의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대지경계선 외부에 대한 경관심의 구역 범위·기준 마련

○ (**개방발코니 설치 활성화**)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에서의 활동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식 아파트의 폐쇄적인 공간구조 개선 검토


[코로나 이후 발코니 이용 변화 사례(좌) 및 발코니 적용 주택(가운데, 우)]

실천과제 2.2 미래형 경관을 대비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

□ 도시와 비도시 간 경관 불균형 해소

○ (**비도시지역의 건축경관 관리체계 개선**) 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경관관리가 미흡한 비도시지역에 대해 경관심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경관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 중점경관관리 구역, 경관심의 등의 제도 보완 및 구체화를 통해 경관관리 소외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유도**) 도 또는 시·군 경관계획과 별도로 특정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권장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장소단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자가 점검을 통해 계획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 및 운영매뉴얼 배포

○ (**비도시지역 관리방안과 소외지역 경관 관리**) 도심, 농·산·어촌, 해안·도서 등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경관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개정

※ 중첩 규제로 미개발된 접경지역은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제적으로 경관형성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통합적 경관계획 수립 필요

□ 신기술을 활용한 3차원 경관관리

○ (**미래형 도시 경관영향요소 예측 및 관리방안 마련**)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 도시공간 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 (**경관심의에서 신기술 활용방안 검토**) 경관심의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3D 공간정보 및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주변 경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

▌3차원디지털 가상도시 구축 사업 시행 (인천광역시, 2019)

- 행정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시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상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3차원 도시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연구 진행
- 정밀한 도시정보를 구축하고 지아이에스(GIS) 디지털 트윈기술 적용
- 도시계획,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재생사업, 토목공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시모델을 구축하여, 도시의 구조물이 변경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경관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경관포털 정보 구축 및 운영**) 정보이용 대상별 서비스 유형(대민서비스, 경관행정 서비스 등)을 고려한 경관포털 콘텐츠 구성 및 포털 구축·운영

추진전략 3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 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

실천과제 3.1 건축자산 체계 확립과 정책지원으로 보전·활용 활성화

□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규제 및 지원수단 다양화

○ (**건축자산 지원수단 현행화 및 신규 인센티브 마련**)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신규 인센티브 방안 및 구체적인 적용 기준 마련

※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추진근거가 명시된 지원수단 중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현행화

○ (**건축자산의 합리적 건축기준 및 대체성능 기준 개발**) 건축자산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 시 요구되는 기술, 디자인, 성능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건축자산의 가치 유지 및 안전·에너지 성능 등에 관한 대체성능 제시

○ (**건축자산 전담조직 및 지원기구 설립·운영**)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홍보 등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전담조직 또는 지원기구 설립·운영

□ 건축자산의 공신력 있는 통계 생산과 시민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

○ (**건축자산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및 지속적 조사체계 구축**)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산업동향 등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한옥 등 건축자산 통계 생산 기획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한옥통계 일람(2020년 기준)

한옥 현황	한옥 전수조사	전국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한옥 여부 및 등급(A,B,C) 판정
	전국 한옥 수 추정	전국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옥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국 한옥 수 추정
	한옥 인허가 통계	인허가 정보를 토대로 목조+기와지붕 건축물을 추출하여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한옥 인허가 동향 파악
	한옥멸실 통계	한옥 전수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폐말소대장과 비교하여 한옥멸실 현황 파악
	한옥 공공건축물 통계	국공유 기와지붕 건축물 항공사진 판독, 보도자료·뉴스 및 조달청 발주정보 검색을 통해 한옥 공공건축물 DB 구축
한옥 산업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인식과 거주 수요 파악(1회/3년)
	한옥건축산업 동향	한옥건축 관련 사업체 중 한옥 건축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임금, 매출 등 한옥 건축산업 동향 분석(1회/3년)
	한옥체험업 동향	한옥체험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및 이용 현황 파악(1회/3년)

○ (**건축자산 관련 민간단체 구성·운영 및 홍보콘텐츠 발굴**) 건축자산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운영 관리를 지원·육성하고,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건축자산까지 확대 추진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건축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체계 확립

○ (**지역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의무화**) 지역개발 및 정비 사업* 추진 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초조사는 지역자원 조사, 건축물 현황 조사 등과 연계 실시하여 지역의 거점공간으로서 건축자산 발굴

* 건축자산 유관 사업 예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등

○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절차 및 가이드라인 개발**) 유관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발굴과정, 건축자산 가치 훼손 방지, 건축자산 가치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 건축자산의 실질적인 보전·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유관 사업 추진 부처와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업체계 구축

실천과제 3.2 건축문화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로 건축문화 진흥

□ 대상별 맞춤 건축교육을 통한 시민 인식 확대

○ (**어린이·청소년 기초건축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 초·중·고 학생 대상 기초건축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교육부 교과과정 개편에 대비하여 현행 교과서의 건축·도시 관련 내용을 보완

▌'건축' 관련 진로체험프로그램 목록 예시- 서울시

- 어린이문화예술스튜디오숍 - 글로벌 융합문화예술 체험 (북유럽식 건축메이커교육, 글로벌디자인씽킹 콘텐츠 등)
- 노원환경재단 - 에너지제로건축과 관련된 직업군 알아보기 및 에너지제로건축 교육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체험 – 실내건축 디자인
- 성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미래로 진로여행(건축가 체험)
- 강서공업고등학교 - DIY 건축목공 소품 제작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건축가와의 만남
- 서부권주거복지지사(LH 서부권마이홈상담센터) – 건축가 체험
-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 건축학과 대학 탐방, 멘토링, 직업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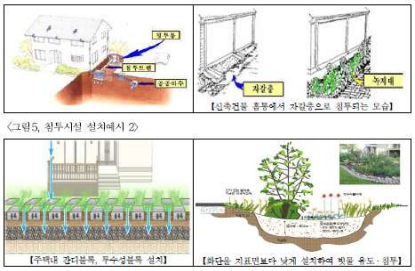


어린이문화예술스튜디오숍-건축 체험 프로그램
'해피버스데이 투 건축'

○ (**일반인 건축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도시재생 시민대학과 연계하여 건축의 다양성과 좋은 디자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내 민간건축주 교육 사례(서울시)

- 2014년, 건축허가부터 철거, 착공, 완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을 표준안내문으로 제작
- 78가지 내용에는 철거 ▸ 착공 ▸ 공사진행 ▸ 사용승인 ▸ 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각 분야(건축, 환경, 측량, 도로, 터 파기, 하수,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안전, 민원 등)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동 안내문 배포


건축물 및 주택에서의 침투시설
설치방법 설명

□ 건축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건축교육·문화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확장성 증대**) 지역거점 공공건축에서 건축교육 및 문화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 건축문화제 콘텐츠 다양화

○ (**건축교육·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발판 마련**) 전문인력을 해외 건축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 국제건축문화제에 홍보관 운영 및 홍보자료 배포로 국내 건축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정적인 기초건축교육 운영, 건축교육 자료 관리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진흥원 역할 부여

□ 건축자산 체험 기회 확대로 인식 확산

○ (**한옥건축양식 모델 개발 및 확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책대상 중 하나인 '한옥건축양식'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 건축물에까지 확산하여 체험 기회 확대 도모 및 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

▌한옥건축양식 유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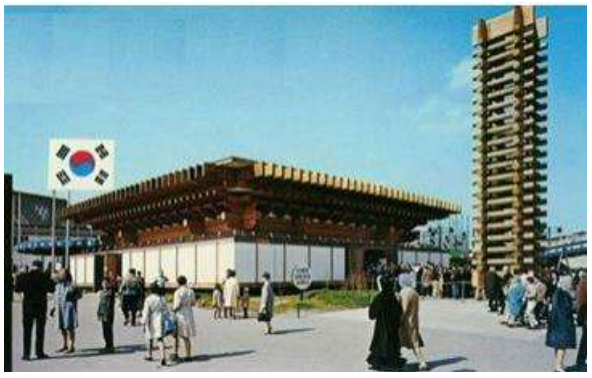
유형1 : 현대건축+한옥



유형2 : 한옥풍 건축



유형3 : 콘크리트 한옥



유형4 : 한류 건축

○ (**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확대**) 한옥(형) 공공건축 조성의 장애가 되는 '한옥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기술개발연구단에서 개발한 신기술 적용 및 시공 자문단 운영

정책목표2. 지역 건축안전 및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추진전략 4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

실천과제 4.1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및 운영관리 강화

□ 건축물의 에너지최적화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 (**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설계 지원체계 구축**) 제로에너지건축물 구축 및 그린리모델링으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BIM과 연계한 성능검토 시스템 개발 등 녹색건축물 최적화 시뮬레이터 개발·보급

–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커튼월, 단열문 등) 보급 활성화 추진

○ (**에너지최적화 운영 · 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 건축물 통합관제센터(TOC)를 구축하여 준공 후 운영단계 성능 모니터링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최적 운영 서비스 제공

– 건축물 에너지통계 생산 및 기후, 인구 등과 연계한 신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현대 AutoEver 제공 스마트시티 서비스 '스마트그리드'

· 공장, 건물 등에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경영체계 구축, 에너지 절감 등의 가치 창출

*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개별 수용가능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에너지운영 환경 지원



· TOC (통합운영센터)
- 공장, 건물, 주택에너지에 대한 통합관제
- 실시간 모니터링
- 이상상황 발생 이벤트 인식 및 처리
- 각종 기초데이터 관리

· Cloud-EMS
- 현황분석 : 생산량, 과거 수치, 주요 설비/기상변수별 통계
- 요금분석 : 최대부하, 경부하, 시간대별, 공급자별 요금 제공
- 목표관리 : 베이스라인 추정, 설비효율/피크/대기전력 관리
- 예측 시뮬레이션 및 운영 스케줄링 다중분석
- 에너지 충/방전 모델링

[에너지 관리 시스템]

○ (**녹색건축물 건설 역량 제고**) 녹색건축물의 실질적 성능 구현을 위해 법정 교육과 연계한 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 대상 녹색건축 시공·건설사업관리 교육제도를 마련

– 녹색건축 관련 공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교육 및 우수 업체 인증 부여를 통해 녹색건축물 시공품질을 높이고, 건설 관리자를 위한 세부 공종별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실행력 제고**) '23년 5백㎡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조기도입 추진 및 공공부문 단계별 등급 상향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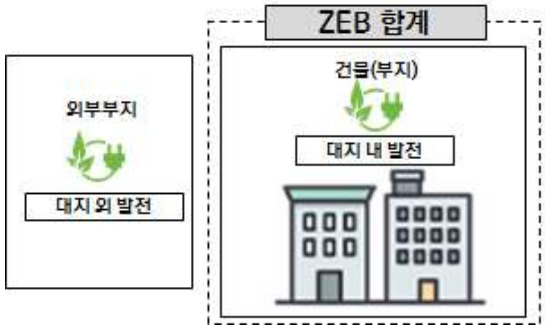
– 제로에너지 구현이 가능한 건축물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민간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 방향 수립

○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열교 방지, 다양한 형태의 차양, 신기술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 영향 요소의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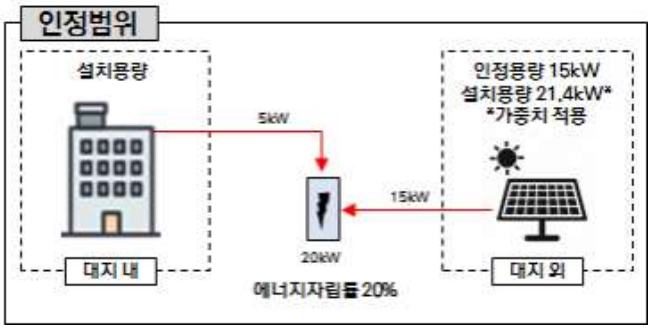
– 에너지자립이 어려운 건축물은 에너지 생산 개념의 신재생에너지 간접 대체 인정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유휴 공공부지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생산량 거래 모델 구축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

-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부지 밖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도 생산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고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시 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 내뿐만 아니라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off-site 생산량)에 대해서도 인정·평가될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률 용어와 산정식을 개정



[Off-Site 개념]



[Off-Site 발전량 인정 예시]

출처(글, 그림): KHARN(2018), ZEB인증 시 신재생E off-site 생산량 인정(http://www.byez.kr/bbs/board.php?bo_table=ez_channel02&wr_id=53)

○ (**에너지효율 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성능관리 기준 마련**) 에너지절약 계획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성능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최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단독주택, 동·식물원, 5백㎡ 미만 건축물, 대수선 행위 등

실천과제 4.2 그린리모델링과 재원 확보로 녹색건축 보급 확대

□ 녹색건축 재원 마련 및 경제성 제고

○ (**녹색건축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모델 개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녹색건축기금 설치 근거 마련

– 민간 주도형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녹색건축채권 금융모델 개발

※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구축('20.12), 녹색 분류체계 발표('21.6), 녹색채권 면세혜택 제공(녹색금융 특별법) 등을 추진

○ (**녹색건축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용적거래, 기금 납부, 에너지 생산량-절감량 거래 등 시범모델 발굴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공공기여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도시계획과 연계한 신규 인센티브 시범 도입

○ (**탄소중립 커뮤니티 조성 기반 마련**)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커뮤니티 단위에서 에너지 공유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역/지구, 캠퍼스, 주거 생활권 등 다양한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커뮤니티 시범사업 도입

▌경남 하동 목통마을

- 17가구 4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산골 마을로 국내 최초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에너지 자립을 달성
- 계곡물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소(99kW), 풍력발전(12kW), 태양광(30kW)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 전기를 자체 충당
- '차 없는 마을' 조성, 방문객 예약제, 야생화단지, 마을안길 황토 포장, 탄소 배출 지수 개발, 100세 건강진단사업, 계절별 음식개발 보급 사업 추진



□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공공부문 선도형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 추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의무화를 통한 주기적 성능 점검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지원 및 유도**) 노후 건축물 특성별로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그린리모델링 유도를 위해 소유자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공가이드

· LH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만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공가이드

– 그린리모델링 각 요소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시공과정 상의 단계별 유의사항과 체크포인트 정리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가 관리감독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기술과 고효율 설비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공가이드 제공

· 가이드라인 목적

– 그린리모델링 시공 시 각 기술 요소별로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고품질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달성



추진전략 5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

실천과제 5.1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건축물 안전성능 향상

□ 신축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안전기준 강화

○ (**화재 취약 건축물 대응 전략과 자재 화재성능 개선**)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공공이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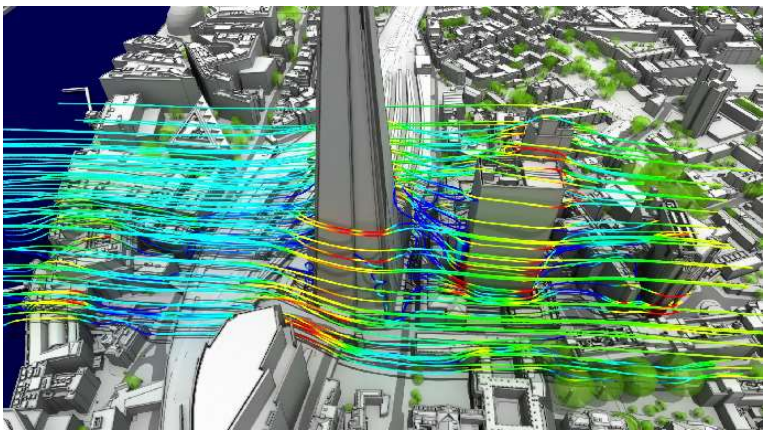
– 안전관리 충당금을 마련하거나 자발적 보강 시 보강비용 지원 등 민간시장 주도 화재안전성능 보강 활성화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 의무화 대상 건축물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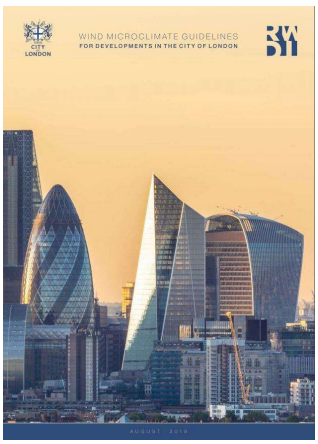
- (사업개요) 국토부는 '20년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무화 대상 건축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22년까지 일정 규모의 보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 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 (지원비용) 총 공사비용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 = 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하고, '21년에는 약 430동의 건물에 약 57억원을 지원할 예정

○ (**건축물 내진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건축관계자(건축사, 구조기술사, 감리 등)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관련 내진기준 및 시설안전관리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

○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 대응력 제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강풍 등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영국 런던시 풍환경 시뮬레이션]



[런던시 바람 미기후 지침]

□ 건축물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마련

○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전담조직 활성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재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설치 확대 유도 등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허가 전담부서 구축 및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화재 등에 노출된 건축물의 실태와 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유형을 도출하여 건축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화재, 재난 등에 취약한 지역과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방재관리와 피난유도 계획 마련 등에 활용

○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관리 및 실내환경 개선**) 육안만으로 정확한 안전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IoT, ICT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기술 개발 및 R&D 사업 추진 지원

– 방재, 방범,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등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실내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홈 기술 확산

▌드론을 활용한 건축구조물 안전점검 사례

・(건축물 안전진단) 드론을 통해 획득한 영상정보를 3D 모델로 재구성하여 건물의 기울기 및 각종 균열을 측정



[건축물 안전진단(모델링 및 보정작업(왼쪽, 가운데), 건물 기울기 및 각종 균을 측정(오른쪽))]

실천과제 5.2 신 재난 상황에 적응하는 건축·공간 환경 재정비

□ 재난 대응 임시주거시설 조성

○ (**자연재해 취약건축물 및 임시주거시설 계획기준 마련**)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변화에 취약한 건축물 유형과 시설 특성을 도출하고, 유형별 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정비방안 마련

– 구호와 보호 기능과 더불어 이재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에 구체적인 시설계획 및 기준*을 포함

* 위생 및 편의시설, 주방설비, 세탁시설 등

○ (**단계별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운영**) 재난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설 유형 및 단계별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모듈러 주택, 연수시설, 기숙사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일본 오나가와 임시거주용 컨테이너주택단지]



[코로나 구호 지원을 위한 임시 병원(LA, 뉴올리언스)]

□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예방기능 향상

○ (**건축물 유형별 감염병 예방 계획기준 마련**) 요양병원·요양원,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 밀집도가 높은 용도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시설기준 개선방안 마련

※ 건축물 유형별로 공조, 환기설비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관리계획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용도 및 공간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설계전략 발굴, 시설개선 가이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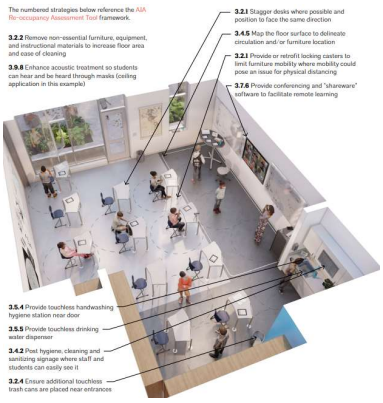
– 공공주도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리모델링 설계모델 개발·확산

▌미국 AIA, Reopening America: Strategies for Safer Buildings

・AIA는 코로나 19의 재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주안점을 제시하는 '더 안전한 건물을 위한 실행전략(Reopening America: Strategies for Safer Buildings)' 가이드 발간



[감염병에 안전한 업무시설 설계전략]



[감염병에 안전한 학교 설계전략]

○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감염병 확산시기에 현재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 자산 후보군을 선별

– 요양원 등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시설 현황은 DB로 구축하고, 감염 확산에 대응하는 격리계획 마련

▌**감염병 예방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세종시 집현동 4-2 생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실시한 복합주민공동시설 설계공모

– (사업개요)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새나루초등학교 인근 부지면적 1만 5,009㎡, 연면적 1만 6,656㎡ 규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인 설계안 마련

– 감염병에 취약한 '3밀' 건축요소(밀집·밀폐·밀접) 제거

・신개념(거리두기·환기·비접촉)이 구현된 건축 실현

– 이용자 동선 분산시켜 밀집 방지, 환기와 채광 극대화, 비접촉 설비기기와 향균 성능 마감재 적용



[세종시 4-2생활권 집현동 복컴 설계도]

추진전략 6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

실천과제 6.1 지역 동네 안전 및 공동체성 회복

□ 지역 공동체 거점공간인 동네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성능향상

○ (**소규모 건축 공사 세부규정 마련 및 안전강화**) 소규모 건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인에 관한 업무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체계 마련

– 소규모 건축설계 대가를 현실화하고, 소규모 건축 설계공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이공모 제도 등 저부담 발주방식 마련 및 품질 중심의 설계 채택

–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제도 지자체 확산 및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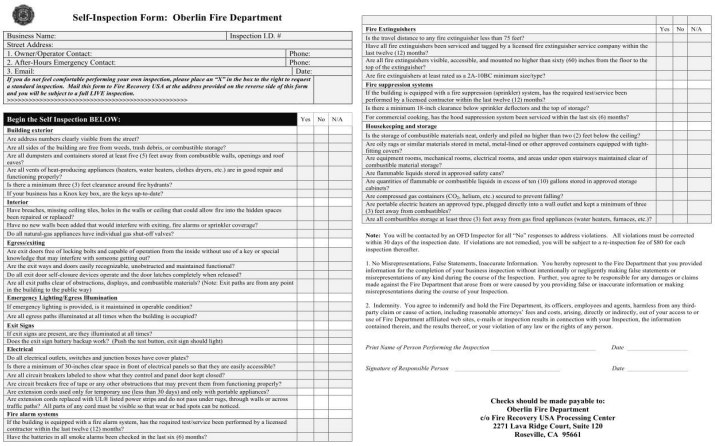
*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7453호)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시행: '20.12.10.)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활성화**)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을 강화하고, 우선적으로 안전보강이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 유형을 발굴하여 적정 보강방안 제시

○ (**소규모 건축물 안전 자가점검체계 마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상시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건축안전 자가점검표 및 자가점검·보강 매뉴얼 마련

▌미국 Oberlin의 건축물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미국 오하이오주 Oberlin 소방청에서는 위험 수준이 비교적 낮은 상업시설이나 밀도가 낮은 소규모 시설들의 안전점검을 위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
-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들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소방청 웹사이트에 제출해야하며, 해당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추가비용과 함께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받게 됨



Self-Inspection Form: Oberlin Fire Department

Business Name:	Inspection I.D. #
Street Address:	
1. Owner/Operator Contact:	Phone:
2. After-Hours Emergency Contact:	Phone:
3. Email:	Date:

If you do not feel comfortable performing your own inspection, please place an "X" in the box to the right to request a standard inspection. Mail this form to Fire Recovery USA at the address provided on the reverse side of this form and you will be subject to a full LIVE inspection.

Begin the Self Inspection BELOW:	Yes	No	N/A
Building exterior			
Are address numbers clearly visible from the street?			
Are all sides of the building are free from weeds, trash debris, or combustible storage?			
Are all dumpsters and containers stored at least five (5) feet away from combustible walls, openings and roof eaves?			
Are all vents of heat-producing appliances (heaters, water heaters, clothes dryers, etc.) are in good repair and functioning properly?			
Is there a minimum three (3) feet clearance around fire hydrants?			
If your business has a Knox key box, are the keys up-to-date?			
Interior			
Have breaches, missing ceiling tiles, holes in the walls or ceiling that could allow fire into the hidden spaces been repaired or replaced?			
Have no new walls been added that would interfere with exiting, fire alarms or sprinkler coverage?			
Do all natural-gas appliances have individual gas shut-off valves?			
Egress/exiting			
Are exit doors free of locking bolts and capable of operation from the inside without use of a key or special knowledge that may interfere with someone getting out?			
Are the exit ways and doors easily recognizable, unobstructed and maintained functional?			
Do all exit door self-closure devices operate and the door latches completely when released?			
Are all exit paths clear of obstructions, displays, and combustible materials? (Note: Exit paths are from any point in the building to the public way)			
Emergency Lighting/Egress Illumination			
If emergency lighting is provided, is it maintained in operable condition?			
Are all egress paths illuminated at all times when the building is occupied?			
Exit Signs			
If exit signs are present, are they illuminated at all times?			
Does the exit sign battery backup work? (Push the test button, exit sign should light)			
Electrical			
Do all electrical outlets, switches and junction boxes have cover plates?			
Is there a minimum of 30-inches clear space in front of electrical panels so that they are easily accessible?			
Are all circuit breakers labeled to show what they control and panel door kept closed?			
Are circuit breakers free of tape or any other obstructions that may prevent them from functioning properly?			
Are extension cords used only for temporary use (less than 30 days) and only with portable appliances?			
Are extension cords replaced with UL® listed power strips and do not pass under rugs, through walls or across traffic paths? All parts of any cord must be visible so that wear or bad spots can be noticed.			
Fire alarm systems			
If the building is equipped with a fire alarm system, has the required test/service been performed by a licensed contractor within the last twelve (12) months?			
Have the batteries in all smoke alarms been checked in the last six (6) months?			

Fire Extinguishers	Yes	No	N/A
Is the travel distance to any fire extinguisher less than 75 feet?			
Have all fire extinguishers been serviced and tagged by a licensed fire extinguisher service company within the last twelve (12) months?			
Are all fire extinguishers visible, accessible, and mounted no higher than sixty (60) inches from the floor to the top of the extinguisher?			
Are fire extinguishers at least rated as a 2A-10BC minimum size/type?			
Fire suppression systems			
If the building is equipped with a fire suppression (sprinkler) system, has the required test/service been performed by a licensed contractor within the last twelve (12) months?			
Is there a minimum 18-inch clearance below sprinkler deflectors and the top of storage?			
For commercial cooking, has the hood suppression system been serviced within the last six (6) months?			
Housekeeping and storage			
Is the storage of combustible materials neat, orderly and piled no higher than two (2) feet below the ceiling?			
Are oily rags or similar materials stored in metal, metal-lined or other approved containers equipped with tight-fitting covers?			
Are equipment rooms, mechanical rooms, electrical rooms, and areas under open stairways maintained clear of combustible material storage?			
Are flammable liquids stored in approved safety cans?			
Are quantities of flammable or combustible liquids in excess of ten (10) gallons stored in approved storage cabinets?			
Are compressed gas containers (CO_2, helium, etc.) secured to prevent falling?			
Are portable electric heaters an approved type, plugged directly into a wall outlet and kept a minimum of three (3) feet away from combustibles?			
Are all combustibles storage at least three (3) feet away from gas final appliances (water heaters, furnaces, etc.)?			

Note: You will be contacted by an OFD Inspector for all "No" responses to address violations. All violations must be corrected within 30 days of the inspection date. If violations are not remedied, you will be subject to a re-inspection fee of $80 for each inspection thereafter.

1. No Misrepresentations; False Statements, Inaccurate Information. You hereby represent to the Fire Department that you provided information for the completion of your business inspection withou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making false statements or misrepresentations of any kind during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Further, you agree to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s or claims made against the Fire Department that arose from or were caused by you providing false or inaccurate information or making misrepresentations during the course of your Inspection.

2. Indemnity. You agree to indemnify and hold the Fire Department, its officers, employees and agents, harmless from any third-party claim or cause of action,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out of your access to or use of Fire Department affiliated web sites, e-mails or inspection results in connection with your Inspection,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and the results thereof, or your violation of any law or the rights of any person.

Print Name of Person Performing the Inspection _____ *Date* _____

Signature of Responsible Person _____ *Date* _____

Checks should be made payable to:
Oberlin Fire Department
c/o Fire Recovery USA Processing Center
2271 Lava Ridge Court, Suite 120
Roseville, CA 95661

[Oberlin 소방청의 건축물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기후변화·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성능향상**) 기후변화 및 공공건축물 노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속 추진

– 미세먼지, 코로나 대응, 스마트 공공건축 관련 시설계획 기준과 관련 매뉴얼 등을 마련·보급하여 공공건축물의 성능향상에 기여

□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구축

○ (**범죄예방설계(CPTED) 확대 적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안(2019.07.01. 시행)에 따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적용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 공사방치 건축물, 고령화 및 인구소멸 지역, 도심 공동화에 따른 빈집, 빈점포 증대 등 인구·사회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설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옹벽, 외진 골목길, 교각하부 등 삭막한 공간 및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의 환경 개선사업 추진

▌서초구 어번캔버스 사업(빛과 그림이 어우러진 어번캔버스)

• 서울시 서초구는 2016년부터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내 안전취약 공간에 대한 어번캔버스 사업을 추진하여 교각하부, 낡은 옹벽 및 외진 골목길 등 방치된 도시 유휴공간에 벽화, 조형물 및 아트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향상시킴

• 또한 기존 설치분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후 방치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



[공원 오브제 설치(왼쪽), 초등학교 후문 디자인(가운데), 증강현실 체험형 환경개선산업(오른쪽)]

○ (**생활안전 실내 환경 개선 사업**)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

※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 (**미세먼지에 따른 건축물 기밀기준 마련**) 미세먼지와 관련한 건축물의 기밀기준을 국내 여건에 맞춰 마련하고, 실증건축물에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천과제 6.2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 저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

○ (**거점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 SOC 복합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의 운용 및 수요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시설을 공급

– 주민 접근성, 다양한 계층의 참여성, 생활 SOC 공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국가최소수준 및 서비스소외지역을 분석하여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

○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 조성하는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 빈집 및 유휴공간의 관리 및 활용

○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 전수조사를 3년마다 지속 추진,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 체계화

– 공적 지원 강화를 통해 방치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정비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정비모델 개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예시]

사업명	정비 전	정비 후
변경전후		
세부개요	(위치) 거창군/ (중단기간) 9년 (당초용도) 숙박시설	(위치) 거창군 (개발계획) 동아리방+행복주택

○ (**위반건축물 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위반건축물 판명 시 일정기간 동안 자진 정비를 유도하며,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절차 보완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시 유관부서 협력과 함께 타부서의 위반사항 적발자료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위반건축물을 상시 관리

– 위반건축물 중 리모델링이 어려워 철거가 필수적인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자체로 기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등을 발굴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제도 개선

▌성산읍, 2020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계획('20.3월~12월)

- **(정비대상)**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위반건축물
- **(정비방법)**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실태조사
-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안내, 시정할 기회를 부여
- 조사기간 이후 미정비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집행, 위반건축물 대장 등록 및 관리를 통해 향후 피해 방지

○ (**지역 빈집 및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농·어촌지역의 폐교를 지역 고령거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 창고로 활용하고, 농·어촌지역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득창출과 일자리 증대

– 휴식공간이 부족한 낙후된 도시환경에 저이용 소공원, 도심 주차장 1면 등 솔루션이 필요한 자투리 대상지를 활용하여 마을과 지역대학생이 함께 공간 리모델링 제안

▌부산 봉산마을 "빈집 줄래 살러 올래" 공모전(2020)

- (공모취지) 부산시 영도구 봉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 내의 빈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공간과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생활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현희망자 모집
- (당선자 혜택)
  - 당선 대상지에 대해 빈집 5년 무상임대
  - 마을소개, 도시재생사업 설명, 창업 컨설팅, 공동체 교육 등의 정보제공 및 멘토링 진행
  - 이론교육 및 실기실습 진행을 통한 입주공간 인테리어 DIY 교육 제공
  - 입주 전 리노베이션 스쿨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인테리어 과정 일부 지원
  - 창업 성공기, 지역살이 세미나 및 마을주민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숙박지원 : 입주 준비기간인 2020년 2월~3월 약 2개월간 봉산마을 게스트하우스 숙박 지원



정책목표3.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추진전략 7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실천과제 7.1 건축시장 역량 강화 및 산업 확대

□ 동네 소규모 건축산업 구조 개선 및 신뢰성 확보

○ (**우수한 소규모 설계·시공업체 등록제도 도입**) 우수 소규모 시공업체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DB를 구축 하고, 공공건축 시공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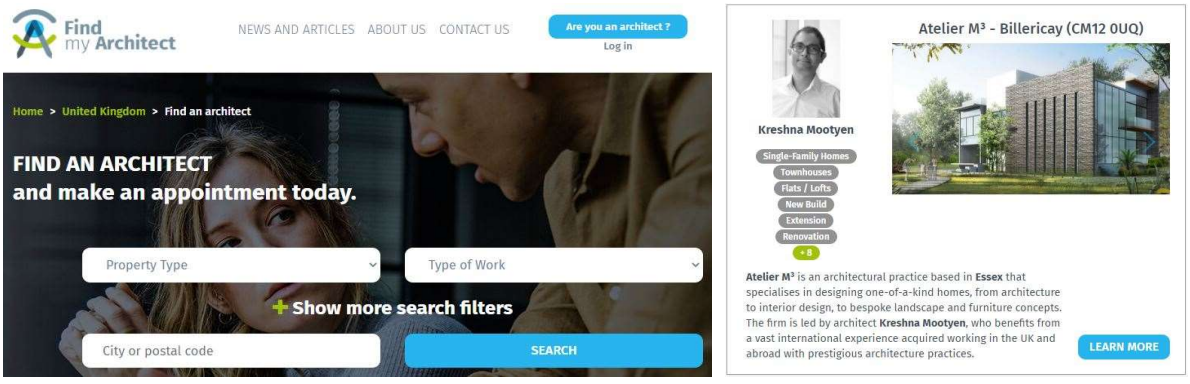
* 공사관리(계약공기 준수, 하자관리 체계 등),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기술 능력(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신인도(인력보유 안정성, 수상 실적 등) 등

○ (**지역 건축가 및 소규모 시공업체 매칭 시스템 개발·운영**) 건축 사업체의 신뢰성이 반영된 지역 우수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소개 플랫폼 도입·운영

– 건축 유형,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조, 대수선, 리모델링, 유지관리 등) 등 전문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건축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

▌Find My Architect

- 신설, 확장, 개조, 보수 등 건축 유형을 카테고리화하여 해당 전문분야별 지역건축가와 클라이언트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국 내 건축가·클라이언트 무료 매칭 시스템
-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건축가가 소개되며, 작업경력, 이력사항 등의 상세 정보와 연락처가 함께 제공되어 클라이언트가 건축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



[Find My Architect 홈페이지(좌), 지역건축가 소개 예시(우)]

□ 건축산업의 혁신을 통한 시장 확대

○ (**건축물 유지·관리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SOC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도입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교육 실시

○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건축산업 혁신기업 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 및 공간 제공, 초기 사업 기획 비용 지원 등) 추진

※ 국토부는 국토교통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5년까지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10대 분야에서 1,000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250개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정

○ (**신기술 융복합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 IT 및 신기술과 결합한 융·복합형 건축산업 장려, R&D 연구를 포함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추진

□ 건축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그린뉴딜, 도시재생뉴딜 등 旣 지원 사업들과 연계 가능한 지역기반* 건축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그린뉴딜 관련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패시브하우스 확대와 도시재생 관련 건축물 또는 경관 기록화 사업 모델 등

○ (**여건변화에 대응한 타 산업 융복합형 연계사업 발굴**) 건축+IT, 건축+문화·예술 등 타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 발굴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산업화

○ (**건축스타트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건축산업에 대한 아이디어–교육–창업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패키지화, 산학협력을 통한 연계 교육 강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 국토부는 건설산업 체질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을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 산업특화형 5세대 전주기 창업보육 기능 수행
- 스마트건설 분야는 '18.9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건립하여, 26개 입주기업에 창업공간·기술개발·초기투자·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외사업 기술공급 계약체결·투자유치 및 제품출시 등 창업과 성장 지원
- 2020년 6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2센터 건립을 착수하고, 완공 후 55개 이상 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 예정

[참고]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단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13) "창업보육센터 운영가이드")

발전단계	[1세대] 공간제공	[2세대] 교육	[3세대] 펀딩	[4세대] 기업화	[5세대] 산업특화
지원서비스	•창업공간 제공 •수동적 사업지원	•1세대 서비스 •창업훈련, 마케팅, 영업지원, 멘토링	•2세대 서비스 •투자교육, 기업평가, 펀딩 준비 등	•3세대 서비스 •기업계획과 관리, 기업가정신 훈련 등	•4세대 서비스 •산업특화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대부분의 국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에 한계) →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

실천과제 7.2 건축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진흥을 위한 통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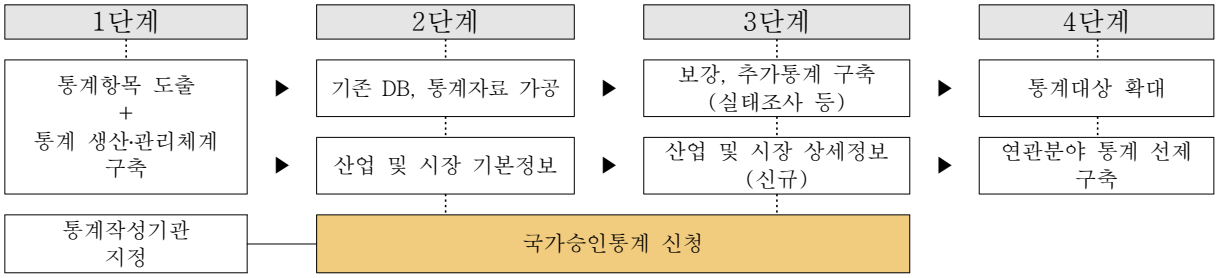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등 건축산업 재정립**) 소규모 건축 설계 시공 등 건축산업 여건을 고려한 건축산업 범위 재정립으로 산업 육성 활성화

* 건축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설계, 유지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의 범위는 불포함

○ (**건축산업 국가승인 통계화 추진**)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필수통계 항목을 도출하고, 건축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이 가능하도록 통계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건축산업 관련 통계의 국가승인통계화 추진절차

- (1단계) 통계항목 도출, 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통계작성기관 지정
- (2단계) 국가승인통계 신청 → 기존 통계자료 가공 + 산업 기본정보 구축
- (3단계) 국가승인 통계 항목의 보강 및 개선, 신규 산업·시장 상세정보 구축 → 국가승인통계 지정
- (4단계) 건축산업 통계 대상의 단계적 확대



[건축산업의 국가승인 통계화 추진과정]

○ (**건축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 해외시장에 대한 분석 정보 DB 구축, 현지 법률·금융·발주기관 정보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설립

▌공공의 해외건설 정보시스템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OVICE Overseas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Engineering)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일환으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가의 법·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을 구축·운영중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 (**해외진출 현황 진단 및 국가별 전략계획 수립**) 국내 건축산업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및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진출 대상국가 및 업종별 전략계획 수립

※ 건설의 경우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은 정부차원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해 외사업 정보 중 일반시장동향, 건설시장동향 등 정보를 제공과 입찰 및 계약, 조사 및 설계, 사업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

○ (**패키지형 해외진출 모델 개발 및 유형별 지원사업 추진**)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인프라, 건축기술자재, 에너지 등 타 산업과 결합한 패키지형 모델 개발 및 세부지원사업 추진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문 지원기관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2018년 6월 설립된 정부차원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 지원
- 사업분야는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전력에너지 및 플랜트, 수자원 및 환경 등이며, 지분투자·채무증권 투자·사업자문 및 금융자문 등으로 사업모델을 설정
- 해외사업 정보에 대해서 일반시장동향, 건설시장동향 등 영업 및 기획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 외에도 입찰 및 계약, 조사 및 설계, 사업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

출처: KIND홈페이지(검색일:2020.8.27), http://www.kindkorea.or.kr/?p=13

○ (**건축산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 및 지정 추진**) 건축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건축진흥원'의 중장기 로드맵(단계별 역할 및 기능) 마련

– 정부부처, 건축 관련 학·협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건축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지정 또는 설립 계획 수립

[진흥원 관련 유사 사례]

구분	역할 및 기능	근거법
KIRIA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OREA INSTITUTE FOR ROBOT INDUSTRY ADVANCEMENT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정책의 개발을 지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SPACEN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 산업을 차세대 성장 기반으로 진흥·육성하기 위해 설립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장르별 산업 지원과 해외수출, 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 문화기술 개발, 정책연구와 금융 지원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진흥 도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 육성 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건축표준계약 모델 개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산업이 통용될 수 있는 건축산업 관계자 표준계약과 계약방식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추진전략 8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포용 건축행정제도 개선

실천과제 8.1 합리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 및 관련 제도 이해 증진

□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문성 확보 및 개선

○ (**건축 관련 인증제도의 단계적 통합**) 파편화되어 운영 중인 건축 관련 인증제도의 혼란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가능한 인증제도는 재편하여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건축물 성능 중심의 종합인증체계 마련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 현황]

인증명칭		관련법규	주관부처	인증 진행 시기			
				건축심의	사업승인	착공	준공
환경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부 환경부		▲		▲
에너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규정	국토부 산업부		▲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부 산업부		▲		▲
IT	지능형건축물인증	• 건축법,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부	▲			

○ (**건축허가 단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허가 전담부서 구축 확대로 전문성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본인건비 반영 등을 추진하고,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와 연계 등 탄력적인 운영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 2017년 4월 18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건축허가, 유지관리, 감리 등에 대해 건축사가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센터
- 현재(`20.5.)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곳은 32개소(서울시 26개소, 경기도 3개소(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강원도 1개소, 세종시 1개소, 전주시 1개소)로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6개소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건축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한국건축규정 공고 및 운영방안 마련**)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규정에 관한 피드백 절차 마련

– 건축서비스 혁신방안(`19.08.2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 시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의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규정 공고

※ 「건축법」 제21조(건축허가)에 의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기본법」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2015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미공고

○ (**사용자 친화적 건축규정 정보 서비스(e-KBC) 고도화**) 한국건축규정 공고에 따라 시스템 정비와 건축행정단계*별 검토법령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토 결과를 세움터로 보내는 등의 상호활용 플랫폼 고도화

* 사전결정, 건축심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철거, 멸실 등

– 허가 외 착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검색시스템 개선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기능 고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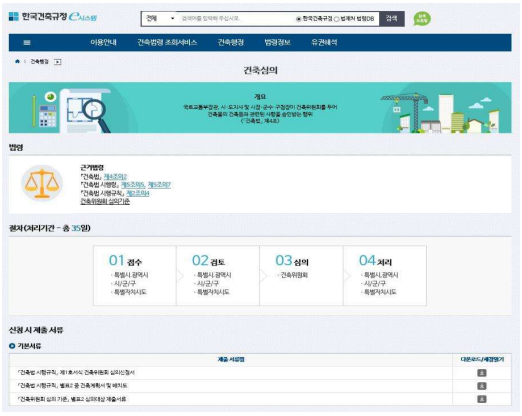
▌e-KBC

• 한국건축규정의 e-시스템 구축으로 건축주 또는 설계자 등이 규모, 시설기준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주요기능) ①건축 관계법령 종합 기능 ② 한국건축규정 공고 기능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 홈페이지 메인메뉴]



[건축심의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 (**건축법령 체계 재정비 및 안내 방안 마련**) 기술관련 기준을 하위 규정으로 분리하거나, 건축법 내 법령체계를 재정비하여 법령간 위계 명확화 및 가독성 제고

–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고려하여 건축행위에 따른 관련 절차 및 기준과 타 법령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는 건축법 해설서 또는 가이드북 마련

실천과제 8.2 새로운 건축 수요변화 대응 및 건축투자 활성화

□ 건축산업 통합재정 확보 근거 마련

○ (**건축관련 특별회계 제도 개선**) 현재 건축 관련 법률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4개의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관계 법률 개정

* 현재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근거한 4개의 개별적 특별회계·기금을 지자체가 설치·운용할 수 있음

**관련법 근거로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진흥특별회계', '건축자산특별회계', '그린리모델링기금'이 별도 운영 중

○ (**건축 관련 개별 법령별 재원 운영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현재 재원 운영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 및 기준 개선

○ (**산업활동의 복합·다양화에 맞춘 용도체계 통합·조정**) 현행 29종의 용도체계를 사회변화 등에 따른 산업활동의 복합·다양화에 맞춰 용도체계를 통합·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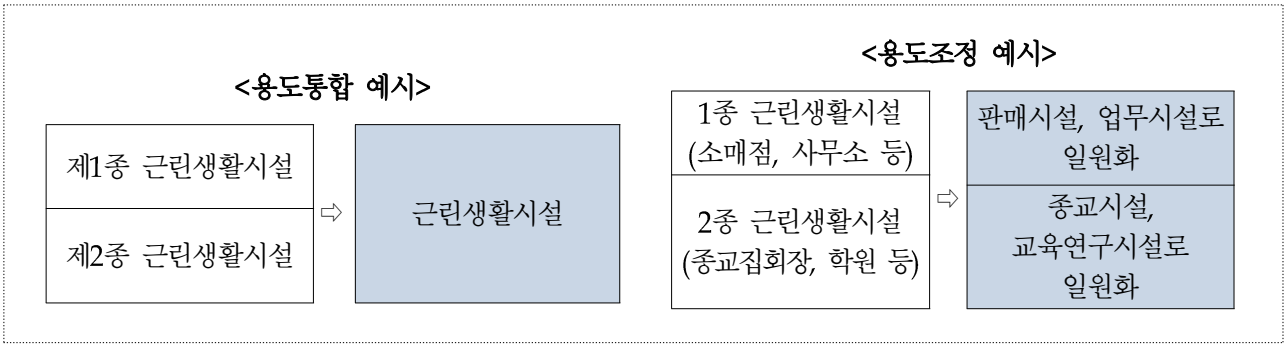
대분류	세분류
오픈스페이스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	오픈스페이스(공원·광장) / 레크리에이션
주거 용도	단독주거 / 공동주거 / 시설주거
커뮤니티형 공공 용도	치안안전보건 / 공공교육연구 / 복지 / 공공문화 / 공공체육 / 공공업무 서비스 / 종교
상업 용도 – 상업 I	주거복합 / 주거지원 서비스 / 교육 / 운동 / 일반 의료 / 주차 / 일반 소매 / 식음(주류미판매)
상업 용도 – 상업 II	식음(주류판매) / 전문 소매 / 판매 / 문화 / 집회 / 숙박 / 오락 / 유흥 / 성인 용도 / 사행 용도
업무 용도	주거복합 / 상업복합 / 업무지원 서비스 / 일반 업무 / 고차 업무
도시형 공공 용도 – 기반 용도	교통시설 / 방재시설 / 발전시설 / 자원처리시설
도시형 공공 용도 – 특수 용도	격리특수의료 / 교정 / 국방 / 장례
공업 용도 – 공업 I	주거복합 / 업무복합 / 자동차 관련
공업 용도 – 공업 II	창고 / 일반 공장 / 유해 공장 / 위험물 취급
농업 용도	농업 / 축산
임시 용도	

분류		설명	
		정의	용도 예시*
오픈스페이스 및 레크레이션 용도	오픈스페이스(공원·광장)	공중의 휴식·오락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조성하는 정원, 조경 등의 부지 또는 시설	1) 공원관리소, 공중화장실, 안내소 … 2) 공원, 광장 …
	레크리에이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주적으로 행하는 놀이·여행 등 활동이 일어나는 부지 또는 시설	1) 유원시설 … 2) 유원지 …
주거 용도	단독주거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동주거	복수의 주택이 집합하여 한 동으로 설계된 형식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시설주거	독립적인 주거 단위로 생활할 수 없는 특정인을 위하여 간호, 보호 등의 서비스와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	
커뮤니티형 공공 용도	치안안전보건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	1)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 2) 지진대피소 …
	공공교육연구	공공에 의하여 인가된 교육 및 연구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	1)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도서관, 공공연구소 …
	복지	사회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관 또는 시설	1) 아동복지·사회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시설 …
	공공문화	하나 이상의 예술, 문화, 과학 분야와 관련된 것을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공공이 조성한 시설	1) 박물관, 과학관 …
	공공체육	다양한 신체활동이 행해질 수 있도록 공공이 조성한 부지 또는 시설	1) 공공체육센터, 체조경기장 … 2) 운동장 …
	공공업무 서비스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되는 기관 또는 시설	1) 동사무소, 우체국, 공공청사 …
	종교	특정 종교를 숭배하며 믿는 신자들이 모이는 시설	1) 교회, 성당 …

[서울시 용도체계 재편 및 정의서 예시]

출처: 이주일, 윤혜림(2019), 용도지역제 효율적 운용 위한 서울시 용도분류체계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 (**복수용도 인정기준 및 용도변경기준 개선**) 현행 건축물을 복수용도 인정되는 '시설군' 개념으로 용도군(대분류)-주용도(중분류)-세부용도(세분류)의 3단계 체계로 개편 검토



□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개선**) "리모델링활성화구역"제도를 타 제도와 연계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규정하고 관련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

○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적 불부합 개선 및 정리**) 다수의 필지가 부정형하게 되어있는 필지의 정형화 사업을 추진(지자체 소규모 지적 불부합 지역 개선사업)하여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종로구 "좋은 땅 만들기 사업"(2011~)

- 종로구는 2011년부터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1건물 多필지 토지의 합병 및 건축물대장 지번 정리, 지적불부합 토지의 지적정리 및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등 적극행정 추진중

– 토지의 모양이 부정형(不定形)으로 되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다수의 필지로 되어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분할과 합병 등의 지적정리로 정형화시켜 '좋은 땅'을 만들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

추진전략 9 첨단 건축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건축 구현

실천과제 9.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 빅데이터 구축

□ 건축정보 사용성 향상 및 시스템 고도화

○ (**건축정보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정보 품질 제고**) 단계적 건축 정보 조사, 데이터 전수 조사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류를 정정하여 건축정보 품질 제고

– 가명 처리된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해 통계분석 및 연구정보 제공 등 건축분야 산업 및 연구 지원

○ (**클라우드 세움터 구축 등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 기존의 각 지자체별로 관리중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개선하여 서비스 향상



[클라우드 세움터 추진 단계]

□ 건축정보 통합 허브 구축 및 유통 강화

○ (**건축 마이데이터 등 건축정보 허브 구축**) 건축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 가능한 데이터 통합채널(허브)을 구축하여 개방

– 소유한 건축물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MY DATA)*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립

○ (**단계적 건축도면정보 개방 확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가명화, 익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데이터 저작권 등 검토

– 건축도면 정보 개방은 활용목적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고, 수요가 높은 건축도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

○ (**건축물 BIM 도면 및 라이브러리 구축**) 건축 설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BIM* 라이브러리와 템플릿 구축

* Building Information Model: 자재, 공정, 공사비, 가격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으로서 전 생애주기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 건축행정시스템에 건축물정보 입력시 BIM 형식의 설계도면 제출을 통한 관련 산업계에 BIM 정착(**LH 공동주택 100% BIM 의무화)**

실천과제 9.2 첨단 건축기술로 건축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확대

□ 스마트 건축 및 첨단기술 확산 기반 조성

○ (**첨단 기술의 현장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첨단 건축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 및 대가기준 마련 추진

– 첨단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기술 저작권 및 보안 유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

○ (**첨단 기술시장 육성 및 성과 확산**) 첨단 건축기술을 개발·활용하는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스마트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 건축·도시와 관련한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연계업종을 연결하는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기술이 도입 가능한 여건 마련

○ (**스마트 건축 인증 및 스마트 시티 연계 시범사업**) 스마트건축 개념 정립 및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등 국가 주도 개발사업 시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사업 모델 발굴

□ 건축 전문교육을 통한 건축역량 강화

○ (**스마트건축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에 대한 학과 과정을 개설하거나 국내 아카데미, 해외 기업 연계

– 건축사 시험을 전산화하고, BIM 등 신기술 및 실제 실무 능력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

○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한옥, 공공건축, BIM, 도시재생 등 건축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지역 대학교에서 양성

– 건축 세부분야별 전문가 수요 증가 예측에 따라 분야별 특화된 전문가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건축 분야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안)]

분야	관련 프로그램
첨단 건축기술정보	건축정보 활용 워크샵 및 공모전, 포럼 개최를 통한 3D 정보 등 건축데이터 활용 촉진·권장, 기술 공모전 개최를 통한 건축기술 개발
건축산업 및 통계	건축산업에 대한 아이디어-교육-창업이 선순환 구조로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계 교육 강화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양성 및 역할 확대, 녹색건축 요소기술 및 녹색건축정책 관련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옥·건축자산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자격증 및 인증제 도입
건축안전	사용자, 허가권자, 전문가,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건축안전 분야별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기존 전문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한국건축산업대전 등 건축 관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건축사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 간 지식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건축사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신기술 및 정보 습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다르며, 비중이 높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맞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새롭게 도입된 기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행정절차 전반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주자,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에 대한 공공기관 관계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교육 신청 시 직접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을 실시

• 건축과 도시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건축문화,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정책·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

– 사회가 만드는 건축: 우리의 공공건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 사회적 관계를 확산시키는 마을공동체의 설계: 단독주택(단지) 공동주택의 설계

–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구산동도서관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제주 설명회

V 과업 추진 체계

정책목표 1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 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추진전략 1]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 개선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1.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생산과정 혁신								
1)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디자인관리체계 정착	① 건축기획 업무 정립 및 제도 정착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	■			
	②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및 실행 투명성 확보		조달청 건설용역과	■	■			
	③ 시공 단계 공공건축 품질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 확립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	
2) 공공건축 발주 역량 강화 및 전담기구 확대	④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정착 및 운영 효율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개별 지자체	■	■			
	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정립 및 설립 확대				■	■		
실천과제 1.2 공간복지 거점으로서 공공건축 관리 강화								
1) 소규모 공공건축 품질 확보	⑥ 소규모 건축설계 발주 정상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예산과		■	■		
	⑦ 설계의도구현 제도 정착		–		■	■		
2) 공공건축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⑧ 공공건축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정책과	–			■	■	■
	⑨ 지역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개별 지자체					■
	⑩ 학교건축 등 공공건축을 활용한 지역거점 육성		교육부 미래학교 추진팀					■

[추진전략 2] 입체적·통합적 공간 구현 및 균형적 경관관리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2.1 건축과 도시가 소통하는 열린 도시 구현								
1) 도시건축 통합설계 관련 제도 개선	① 도시·건축 통합계획 제도화 및 확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주택추진단					
	②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 통합계획 특례 활성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도시정책과 개별 지자체					
	③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및 활성화로 통합경관 형성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개별 지자체					
	④ 소규모 블록 중심 주거지조성 활성화를 위한 법규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⑤ 장소기반 도시설계 기법 개발과 조직 및 교육 정착		–					
2) 생활밀착형 도시경관 개선	⑥ 인지건강디자인 가이드 마련 및 적용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⑦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향상		개별 지자체					
	⑧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주변부 가로경관 개선 제도 마련		–					
	⑨ 개방발코니 설치 활성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실천과제 2.2 미래형 경관을 대비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								
1) 도시와 비도시 간 경관 불균형 해소	⑩ 비도시지역의 건축경관 관리체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⑪ 경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유도		개별 지자체					
	⑫ 비도시지역 관리방안과 소외지역 경관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2) 신기술을 활용한 3차원 경관관리	⑬ 미래형 도시 경관영향요소 예측 및 관리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⑭ 경관심의에서 신기술 활용방안 검토		–					
	⑮ 경관포털 정보 구축 및 운영		–					

[추진전략 3]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 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3.1 건축자산 체계 확립과 정책지원으로 보전·활용 활성화								
1)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규제 및 지원수단 다양화	① 건축자산 지원수단 현행화 및 신규 인센티브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
	② 건축자산의 합리적 건축기준 및 대체성능 기준 개발				■	■		
	③ 건축자산 전담조직 및 지원기구 설립·운영		개별 지자체				■	■
2) 건축자산의 공신력 있는 통계 생산과 시민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	④ 건축자산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및 지속적 조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통계청 통계정책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	■		
	⑤ 건축자산 관련 민간단체 구성·운영 및 홍보콘텐츠 발굴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	■
3) 건축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체계 확립	⑥ 지역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도시재생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	■		
	⑦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절차 및 가이드라인 개발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	■
실천과제 3.2 건축문화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로 건축문화 진흥								
1) 대상별 맞춤 건축교육을 통한 시민 인식 확대	⑧ 어린이·청소년 기초건축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	■	■	■
	⑨ 일반인 건축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2) 건축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⑩ 건축교육·문화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확장성 증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	■
	⑪ 건축교육·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발판 마련							
3) 건축자산 체험 기회 확대로 인식 확산	⑫ 한옥건축양식 모델 개발 및 확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	■	■
	⑬ 한옥(형) 공공건축물 보급 확대		개별 지자체			■	■	■

정책목표 2 지역 건축안전 및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추진전략 4]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4.1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및 운영관리 강화								
1) 건축물의 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① 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설계 지원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축정책과	–					
	② 에너지최적화 운영·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통계청 통계정책과					
	③ 녹색건축물 건설 역량 제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2)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④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실행력 제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⑤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⑥ 에너지효율 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성능관리 기준 마련							
실천과제 4.2 그린리모델링과 재원확보로 녹색건축 보급 확대								
1) 녹색건축 재원 마련 및 경제성 제고	⑦ 녹색건축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모델 개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⑧ 녹색건축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⑨ 탄소중립 커뮤니티 조성 기반 마련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2)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⑩ 공공부문 선도형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⑪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지원 및 유도		–					

[추진전략 5]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5.1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건축물 안전성능 향상								
1) 신축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안전기준 강화	① 화재 취약 건축물 대응 전략과 자재 화재성능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② 건축물 내진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			
	③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 대응력 제고		–	■				
2) 건축물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마련	④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전담조직 활성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	■			
	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과	–			■	■	
	⑥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관리 및 실내환경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과 녹색건축과	–			■	■	
실천과제 5.2 신 재난 상황에 적응하는 건축·공간 환경 재정비								
1) 재난 대응 임시주거시설 조성	⑦ 자연재해 취약건축물 및 임시주거시설 계획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과	–		■			
	⑧ 단계별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운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2)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예방기능 향상	⑨ 건축물 유형별 감염병 예방 계획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			
	⑩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	■		

[추진전략 6]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6.1 지역 동네 안전 및 공동체성 회복								
1) 지역 공동체 거점공간인 동네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성능향상	① 소규모 건축 공사 세부규정 마련 및 안전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안전과	–		■	■		
	②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활성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
	③ 소규모 건축물 안전 자가점검체계 마련						■	■
	④ 기후변화·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성능향상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			
2)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구축	⑤ 범죄예방설계(CPTED)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⑥ 생활안전 실내 환경 개선 사업		–		■			
	⑦ 미세먼지에 따른 건축물 기밀기준 마련		환경부 생활환경과		■			
실천과제 6.2 노후·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1) 저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	⑧ 거점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 SOC 복합화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	■	■			
	⑨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	■			
2) 빈집 및 유휴공간의 관리 및 활용	⑩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개별 지차제	■	■			
	⑪ 위반건축물 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	■		
	⑫ 지역 빈집 및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	■

정책목표 3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추진전략 7]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7.1 건축시장 역량 강화 및 산업 확대								
1) 동네 소규모 건축산업 구조 개선 및 신뢰성 확보	① 우수한 소규모 설계·시공업체 등록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개별 지자체		■	■	■	
	② 지역 건축가 및 소규모 시공업체 매칭 시스템 개발·운영				■	■		
2) 건축산업의 혁신을 통한 시장 확대	③ 건축물 유지·관리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	■
	④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	–		■	■		
	⑤ 신기술 융복합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	■	■			
3) 건축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	⑥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과 도시재생정책과	–	■	■			
	⑦ 여건변화에 대응한 타 산업 융복합형 연계사업 발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		■	■		
	⑧ 건축스타트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	■		
실천과제 7.2 건축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1)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진흥을 위한 통계 구축	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등 건축산업 재정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설정책과	■	■	■		
	⑩ 건축산업 국가승인 통계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통계청 통계정책과	■	■	■		
	⑪ 건축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
2)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⑫ 해외진출 현황 진단 및 국가별 전략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
	⑬ 패키지형 해외진출 모델 개발 및 유형별 지원사업 추진						■	■
	⑭ 건축산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 및 지정 추진		–		■	■		
	⑮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건축표준계약 모델 개발				■	■		

[추진전략 8]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포용 건축행정·제도 개선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8.1 합리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 및 관련 제도 이해 증진								
1)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문성 확보 및 개선	① 건축 관련 인증제도의 단계적 통합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② 건축허가 단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개별 지자체	■	■			
2) 건축관련 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③ 한국건축규정 공고 및 운영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부처	■				
	④ 사용자 친화적 건축규정 정보 서비스(e-KBC) 고도화				■	■		
	⑤ 건축법령 체계 재정비 및 안내 방안 마련				■	■		
실천과제 8.2 새로운 건축 수요변화 대응 및 건축투자 활성화								
1) 건축산업 통합재정 확보 근거 마련	⑥ 건축관련 특별회계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축안전과	■	■			
	⑦ 건축 관련 개별 법령 별 재원 운영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	■			
2)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 및 기준 개선	⑧ 산업활동의 복합·다양화에 맞춘 용도체계 통합·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부처	■	■	■	■	■
	⑨ 복수용도 인정기준 및 용도변경기준 개선			■	■			
3)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⑩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개별 지자체		■	■		
	⑪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적 불부합 개선 및 정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제도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도시활력지원과		■	■		

[추진전략 9] 첨단 건축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건축 구현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실행시점				
				'21	'22	'23	'24	'25
실천과제 9.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 빅데이터 구축								
1) 건축정보 사용성 향상 및 시스템 고도화	① 건축정보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정보 품질 제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			
	② 클라우드 세움터 구축 등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		개별 지자체	■	■			
2) 건축정보 통합 허브 구축 및 유통 강화	③ 건축 마이데이터 등 건축정보 허브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	■
	④ 단계적 건축도면정보 개방 확대			■	■	■		
	⑤ 건축물 BIM 도면 및 라이브러리 구축						■	■
실천과제 9.2 첨단 건축기술로 건축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확대								
1) 스마트 건축 및 첨단기술 확산 기반 조성	⑥ 첨단 기술의 현장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		
	⑦ 첨단 기술시장 육성 및 성과 확산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		■	■		
	⑧ 스마트 건축 인증 및 스마트 시티 연계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		
2) 건축 전문교육을 통한 건축역량 강화	⑨ 스마트건축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⑩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	■
	⑪ 기존 전문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민·관 협력		■	■	■	■